

국회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국민을 대표해 국가 운영의 근간인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며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대한민국의 입법 기관이다.

국회는 헌법 개정안을 제안·의결하고, 법률을 제·개정하는 입법권을 가지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확정한다. 또한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와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을 통제하고, 대통령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등 핵심 공직자를 임명할 때 동의권을 가지며, 중요 국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해서도 국민을 대표해 동의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익 신장을 위해 의회 외교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정수는 300명으로 이 중 지역구 국회의원은 246명이고, 비례 대표 국회의원은 54명이다. 임기는 4년으로, 제19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12년 5월 30일부터 2016년 5월 29일까지이다.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두고 있다.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며, 임기는 각각 2년이다. 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국회를 대표하고 본회의를 주재하며 국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중립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임기 동안에는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부의장은 의장의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하거나 대행한다.

국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뉜다.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 집회하여 10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활동하며, 임시회는 매년 짝수 월(8월, 10월, 12월 제외) 1일에 집회하는 것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활동한다.

위원회는 본회의 심의에 앞서 의안을 심사하는 기관으로 16개의 상임위원회와 2개의 상설특별위원회(예산결산, 윤리)가 있다. 그 외 특정 안건에 따라 설치되는 특별위원회가 있다. 의장을 제외한 모든 국회의원은 전문성과 관심 분야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임기는 2년이다.

교섭 단체는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한 의원 단체이다. 교섭 단체는 현대적인 정당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구

로,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 단체가 된다. 또한, 다른 교섭 단체에 속하지 않은 20인 이상의 의원이 모여 교섭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구성, 의회 외교 단체 구성, 회의에서의 발언자 수, 발언 시간 등을 정할 때 교섭 단체 소속 의원의 비율이 기준이 된다.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및 의원 보좌 직원은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는 입법 지원 조직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 회의 지원에서부터 법률안, 예산결산 심사와 국정 감사 및 국정 조사 지원, 의회 외교 활

동 지원, 민원 업무, 국회방송(NATV) 및 국회 홍보에 이르기까지 입법 및 의정 활동의 핵심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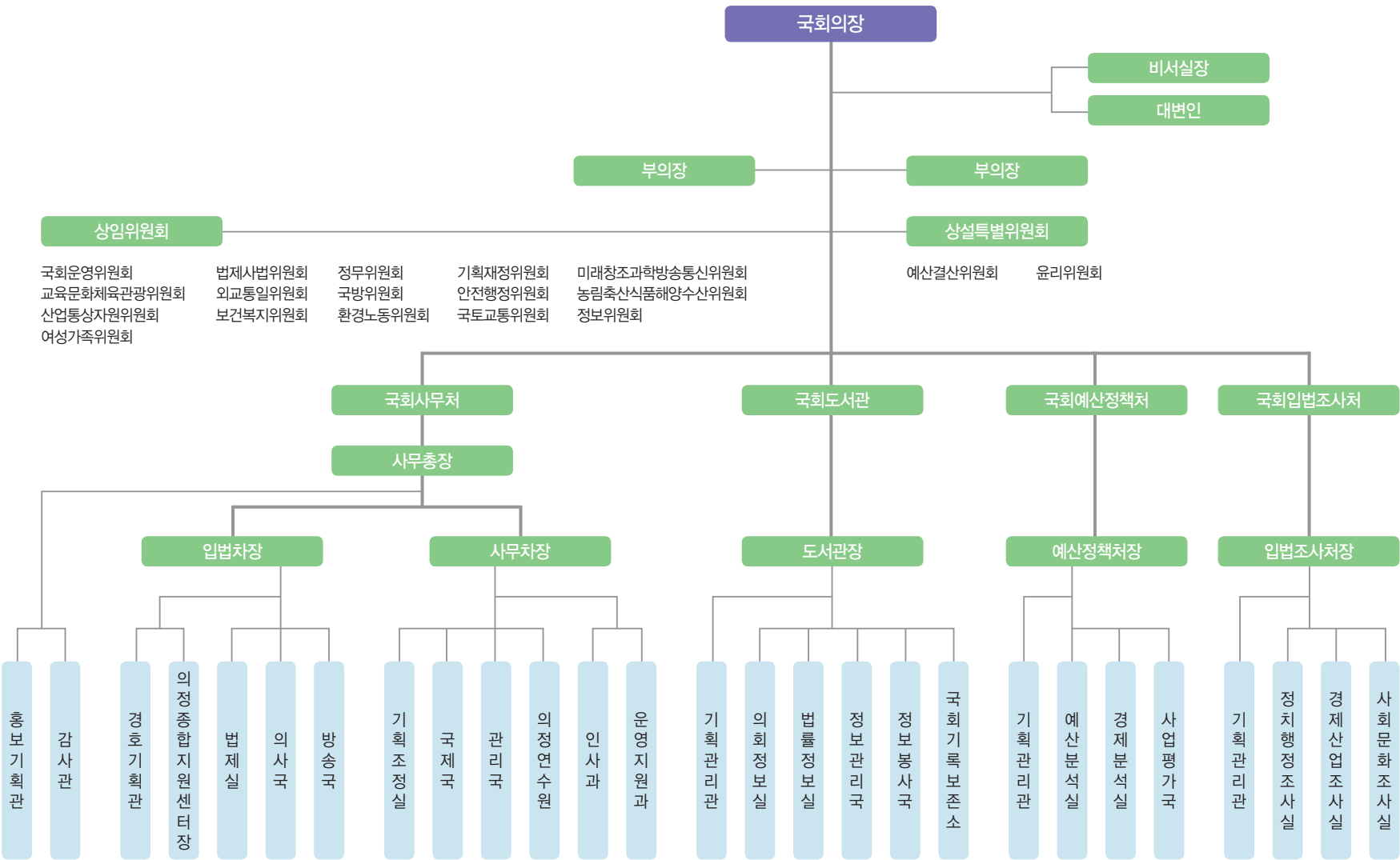
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국정 현안 및 입법 정보의 총괄적 수집자·관리자·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야간, 일요일에도 개관하여 전 국민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연구·분석을 통하여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지원하는 등 국회의 재정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재정 전문 의정 지원 기관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국회의 종합 정책 분석 기관이다.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중립적·전문적으로 조사·연구·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관리·보급하며, 소관 분야에 관한 국내외 입법 동향 및 사례 등에 대해 조사·분석하여 국회의원과 위원회에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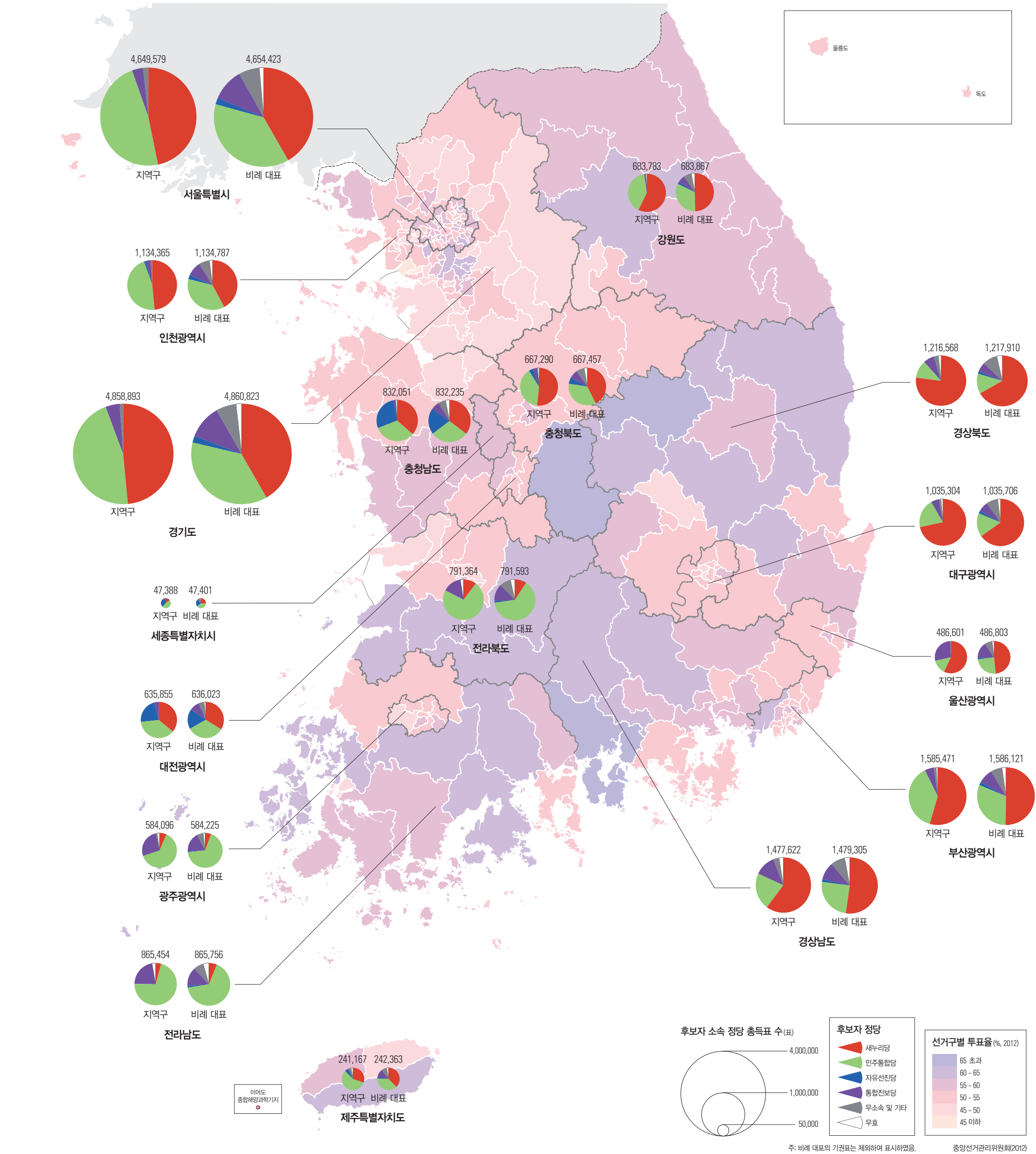
의원 보좌 직원은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원활히 보좌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1인당 7인의 보좌 직원을 둘 수 있다. 의원 보좌 직원의 업무는 크게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분야와 유권자와 소통하는 정부 분야로 구분된다.

국회 조직도



입법부 구성원의 선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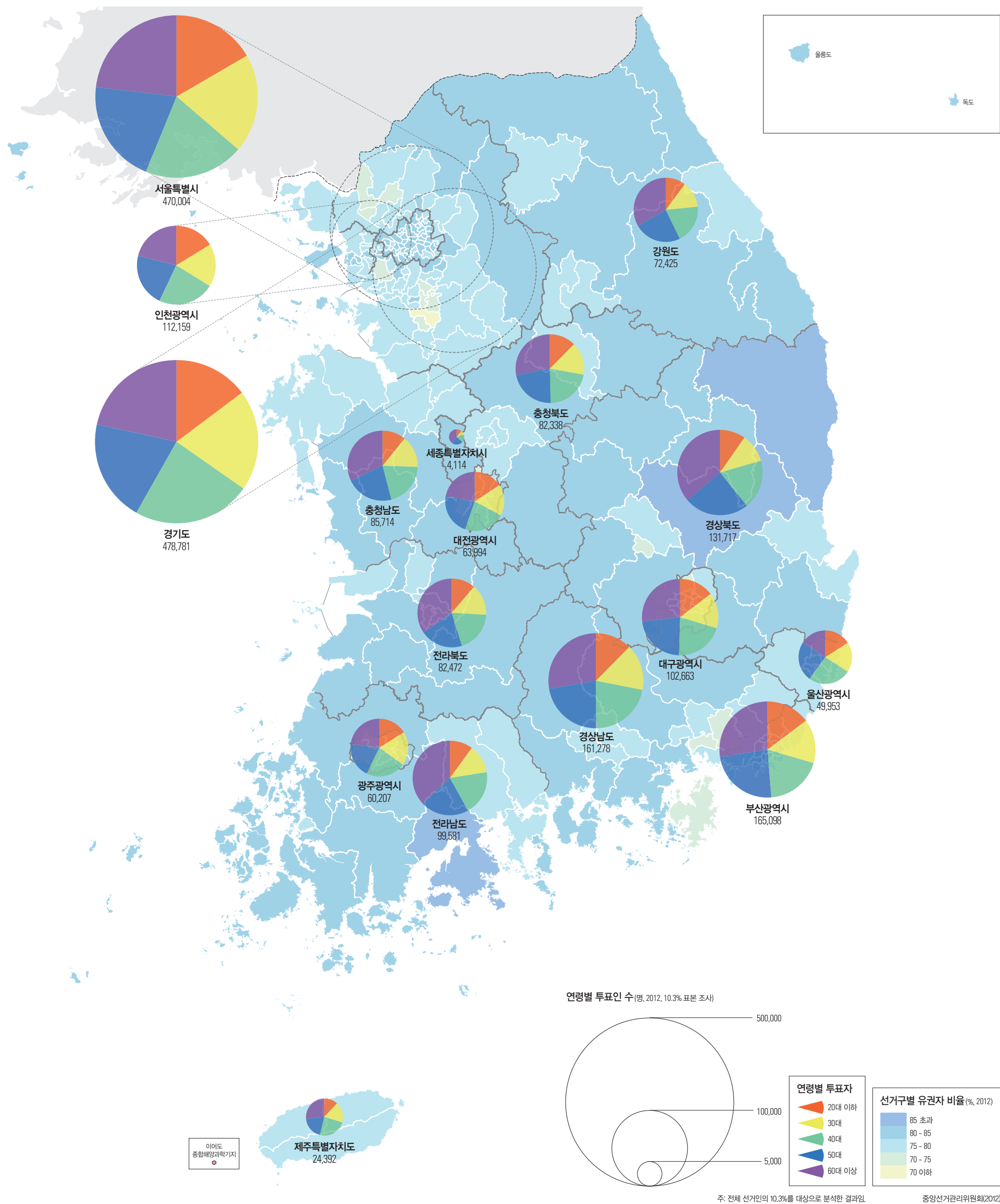
선거는 우리나라에서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며, 통치 권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실현하는 기초적이며, 본질적인 수단이다.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각 선거구별로 최고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지역구 선거(의원 정수 246명)와 전국을 단위로 각 정당의 득표 수에 비례해 당선인을 결정하는 비례 대표 선거(의원 정수 54명)를 통해 선출된다.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다.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약 54.2%이며, 경상북도 문경시·예천군 선거구(68.4%), 경상남도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선거구(65.9%),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 선거구(65.8%) 등은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도시 지역인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낮고, 이외 지역의 투표율은 평균 투표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경향이 있다.

지역구 후보자 소속 정당별 총득표 수를 살펴보면, 새누리당 약 932만 표(43.3%), 민주통합당 약 815만 표(37.9%), 통합진보당 약 129만 표(6.0%)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득표 현황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를 포함한 경상남·북도 일대,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북도, 강원도 등에서 우위를 보였으며, 민주통합당은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전라남·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 우세했다.

한편, 각 정당별 비례 대표의 총득표 수(기권표는 제외)는 새누리당이 약 913만 표(22.7%), 민주통합당이 약 777만 표(19.3%), 통합진보당이 약 219만 표(5.5%) 등으로 나타났다. 비례 대표의 지역별 투표 결과는 지역구 대표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새누리당은 수도권 일대, 경상남·북도 등에서 우세했으며, 민주통합당은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 우위를 보였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연령대별 투표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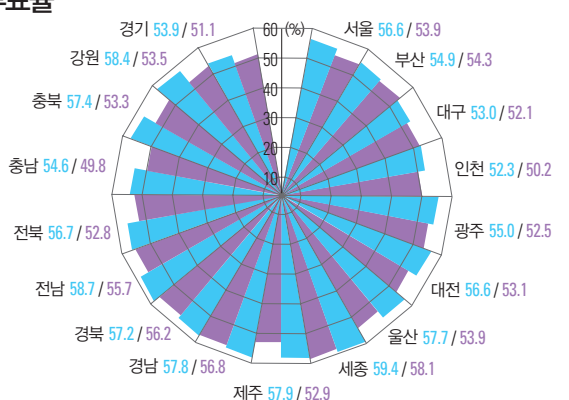
연령대별 투표율을 살펴보기 위해 총선거인 중 10.3%의 표본 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표본은 1,410개 투표구, 4,132,112명의 투표자를 대상으로 체계적 무작위 추출법으로 선정되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연령대별 투표율을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제일 높고, 20대가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령대별 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19~29세는 서울특별시, 30~39세는 경기도, 40~49세와 50~59세는 울산광역시, 60세 이상은 세종특별자치시로 나타났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을 성별, 지역별로 살펴

면, 전국적으로 남성의 투표율이 여성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5.0%)에서 그 차가 제일 크고, 강원도(4.9%), 충청남도(4.8%) 등의 순으로 차이를 보인다. 반대로 부산광역시(0.6%), 대구광역시(0.9%), 경상북도(1.0%), 경상남도(1.0%) 등에서는 남녀 투표율의 차이가 적었다. 남성의 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59.4%), 전라남도(58.7%), 강원도(58.4%) 등이며, 여성의 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58.1%), 경상남도(56.8%), 경상북도(56.2%) 등이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별·성별 투표율

남자 여자

주: 전체 선거인의 10.3%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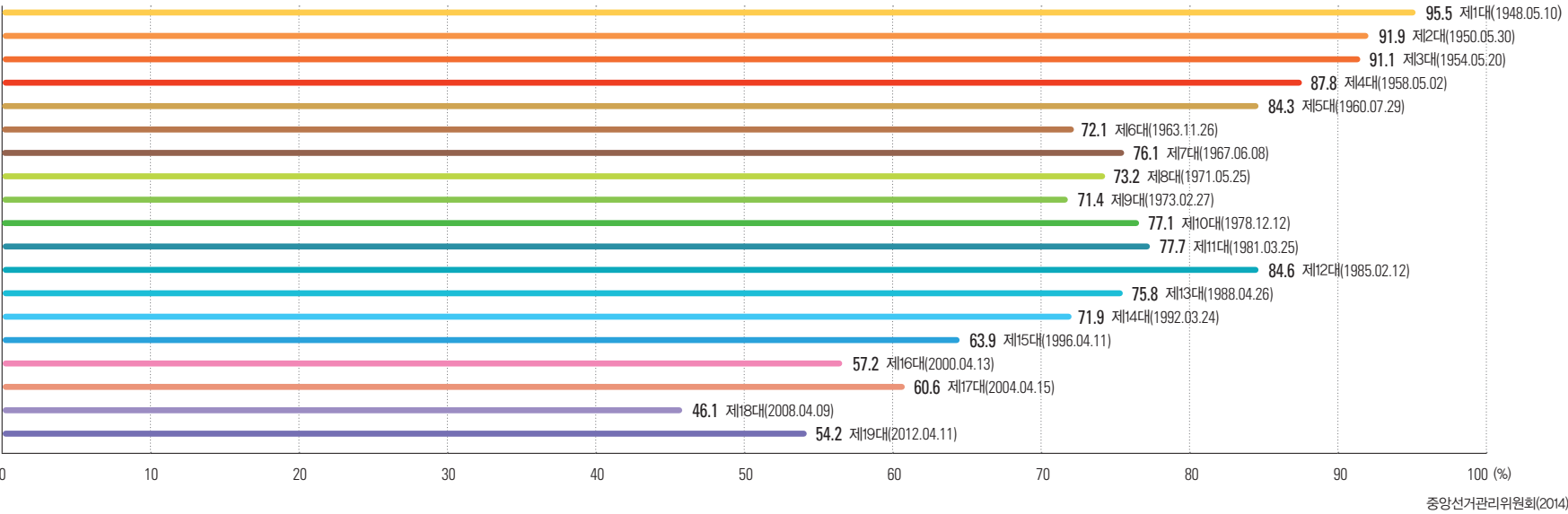


우리나라 역대 국회의원 선거의 변화 추이는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48년에 실시한 제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95.5%에 달했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달리 1985년에 실시한 제12대 국회의원 선거는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역대 가장 낮은 46.1%까지 떨어졌다. 가장 최근에 시행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54.2%를 기록하여 직전 선거보다 8.1% 상승한 결과를 보였다.

재외 국민 선거

재외 국민 선거는 대통령 선거 혹은 국회의원 선거 기간 내, 국외에 거주 또는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단, 외국 국적 취득자는 제외로 하며,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인 국

역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민으로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하거나,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 선거를 할 수 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재외 국민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고,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며, 재외 국민의 권익 신장과 자긍심 및 애국심 고취와 국제화·지구촌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의의를 가진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 국민 선거는 전 세계 158개의 공관 및 대체 시설에 재외 투표소를 설치하여 실시했다. 투표 기간은 6일로 하되,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선거인 수가 200명 미만인 경우는 6일 이내에 탄력적으로 시행했다. 전체 투표율은 지역구 대표 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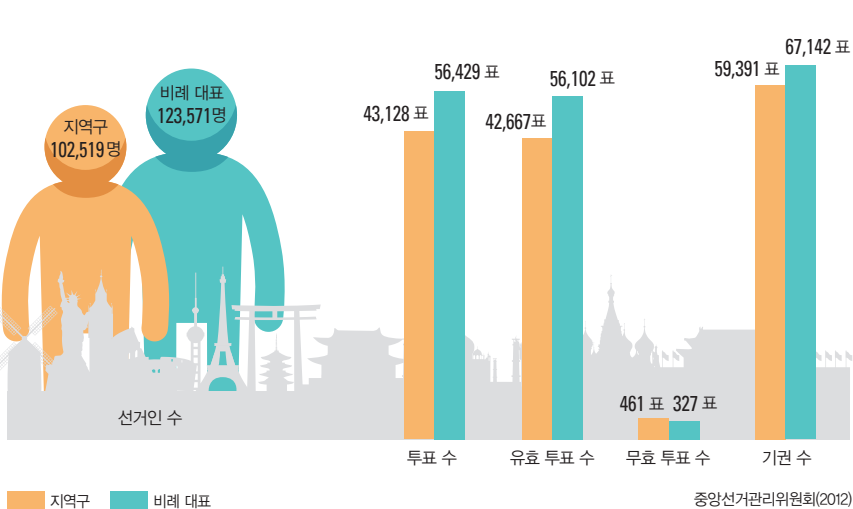
42.1%, 비례 대표 선거 45.7%였다. 각 대륙별로 투표율을 살펴보면, 유럽(57.04%), 아프리카(56.79%), 서남아시아(50.85%), 아메리카(49.07%), 아시아(41.07%)로 나타났다. 또한 각 정당별 득표율은 새누리당 40.0%, 민주당 35.2%, 통합진보당 14.5%, 자유선진당 1.6%, 기타 8.3%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외 국민 선거권 행사의 범위

| 선거권자 | | 참여할 수 있는 선거 |
|------------|-----------------|--|
| 재외 선거인 | | • 대통령 선거 • 임기 만료에 따른 비례 대표 국회의원 선거 |
| 국외 부재자 신고인 |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사람 | • 대통령 선거 • 임기 만료에 따른 비례 대표 국회의원 선거 |
| |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 | • 대통령 선거 •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비례 대표 + 지역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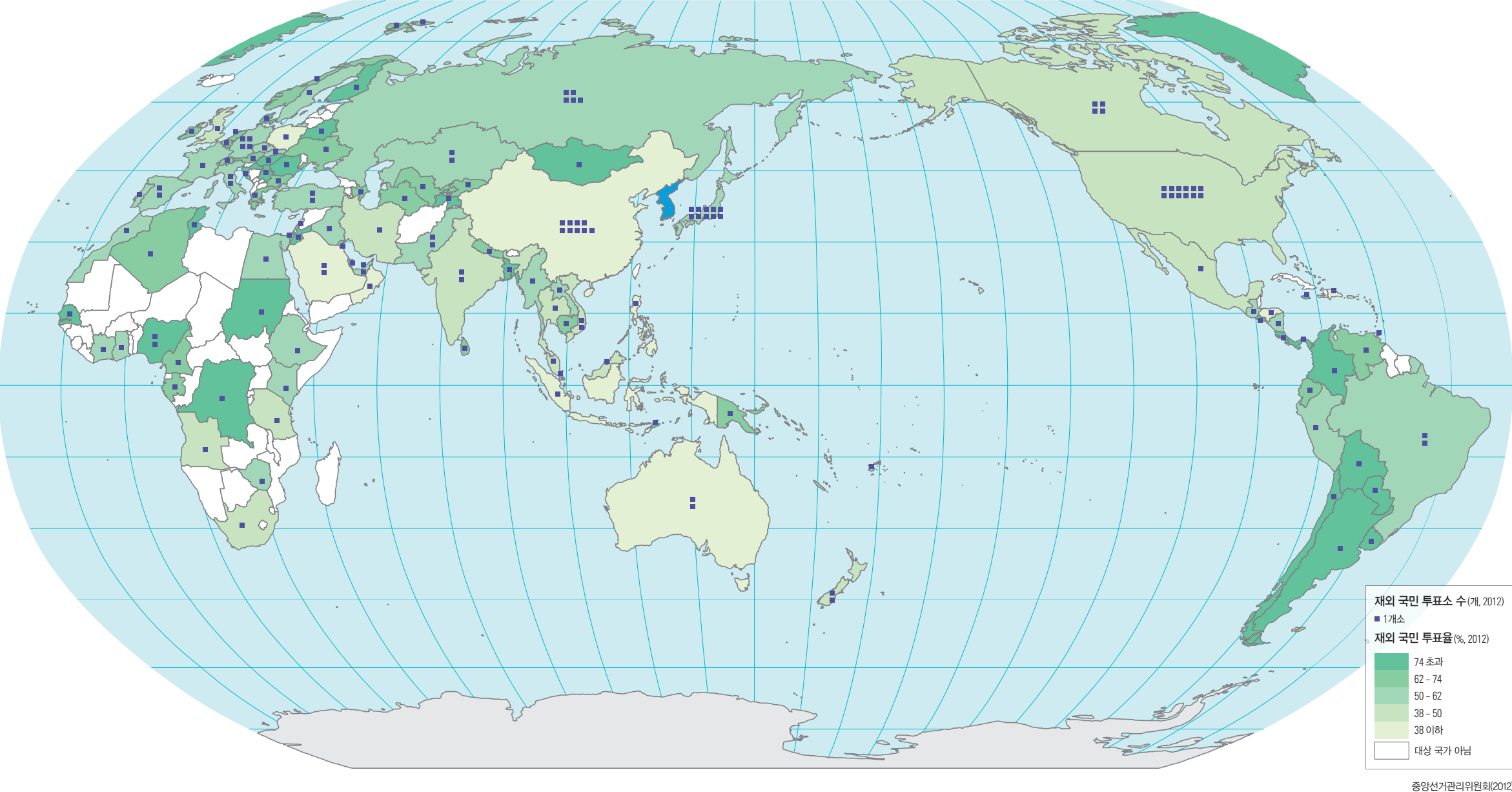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 선거 개표 결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 국민 투표 대륙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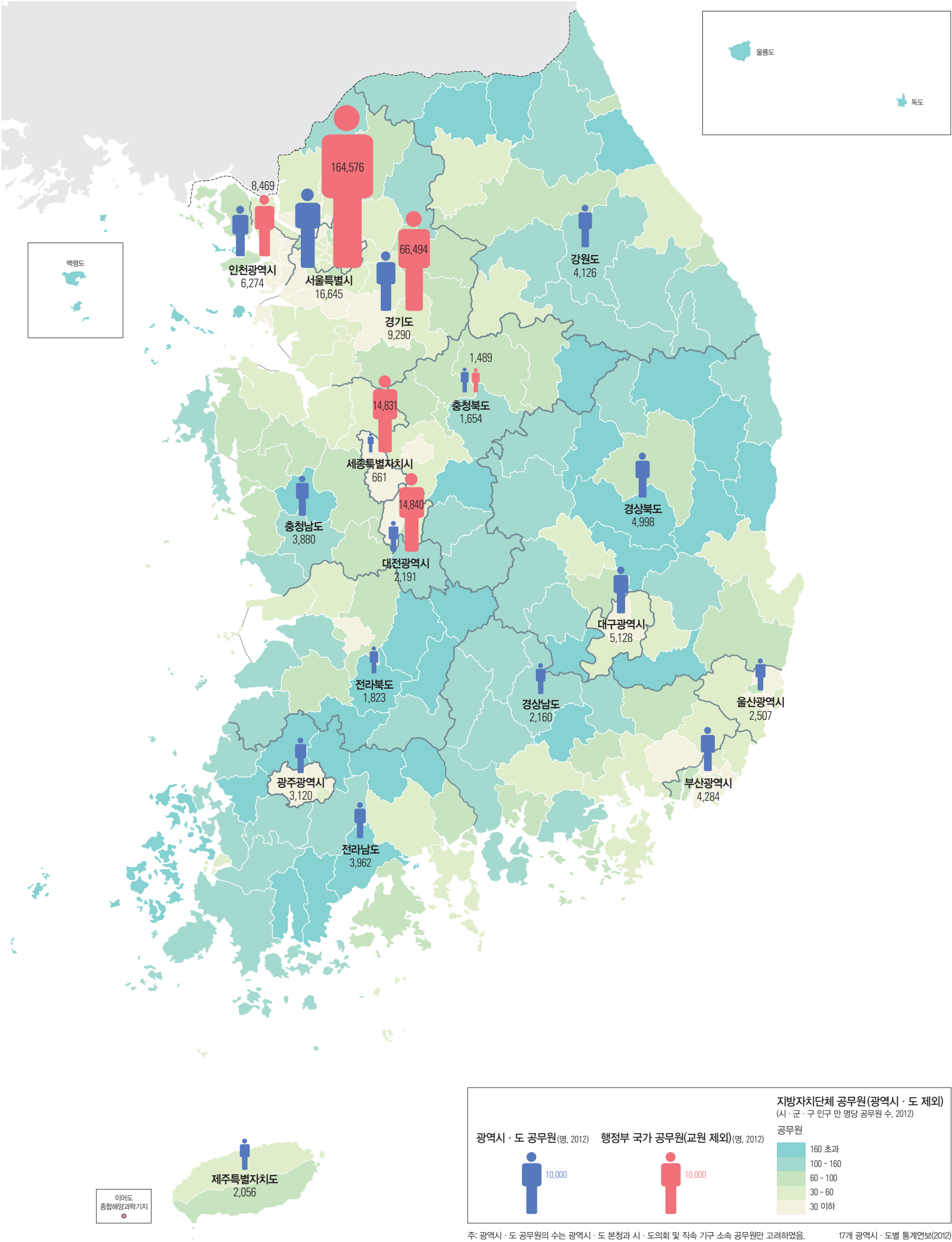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 국민 선거



공무원 현황

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현황



대한민국 공무원은 소속에 따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 구분된다. 2013년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공무원 수는 998,940명이며, 이 중 행정부 공무원이 97.6%(974,518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입법부는 0.4%(3,993명), 사법부는 1.7%(17,431명),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위원회는 각각 0.03%(277명), 0.3%(2,721명)를 차지하고 있다(안전행정부, 2014).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행정부 공무원은 사무 범위에 따라 국가(중앙 정부) 공무원과 지방(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구분된다. 국가 공무원은 대통령이나 소속 장관에 의해 임용되어 국가 사무를 처

리하며, 지방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하여 임용되어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처리한다. 행정부 공무원 중 국가 공무원의 비중은 63.2%(615,726명)인 반면, 지방 공무원은 26.8%(358,792명)를 차지하고 있다(안전행정부,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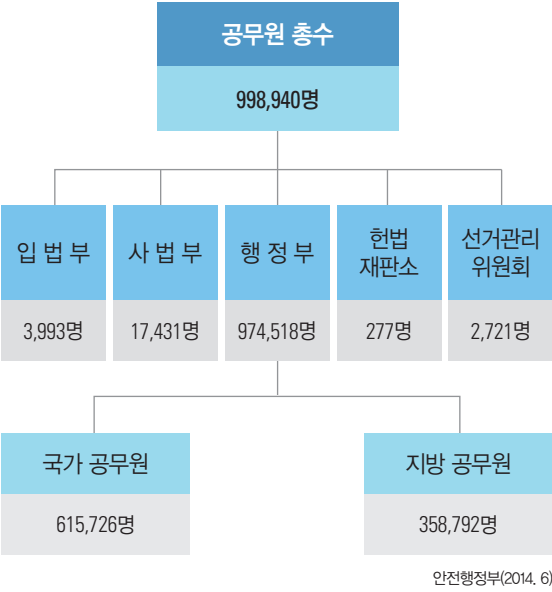
2013년 현재 행정부 17부에 소속된 국가 공무원은 총 440,845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44.1%를 차지한다. 교육부 공무원은 352,538명으로 전체 공무원 중 35.3%로 부처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법무부가 각각 3.3%(33,285명), 2.1%(21,071명)를 차지하고 있다. 17부에 소속되지 않은 국가 공무원의 수는 174,881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17.5%에 해당한다(안전행

정부, 2014).

지도는 2012년 우리나라 행정부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의 지역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국가 공무원의 서비스 공간 범위는 국가 수준에서, 광역 시·도청 지방 공무원은 광역 시·도 수준에서, 시·군·구 지방 공무원은 시·군·구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광역 시·도청 지방 공무원과 시·군·구 지방 공무원은 인구 만 명당 공무원 수의 기준을 공무원 유형별 서비스 공간 범위로 구분하였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 행정부 국가 공무원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주로 서울특별시(164,576명), 경기도(66,494명), 대전광역시(14,840명),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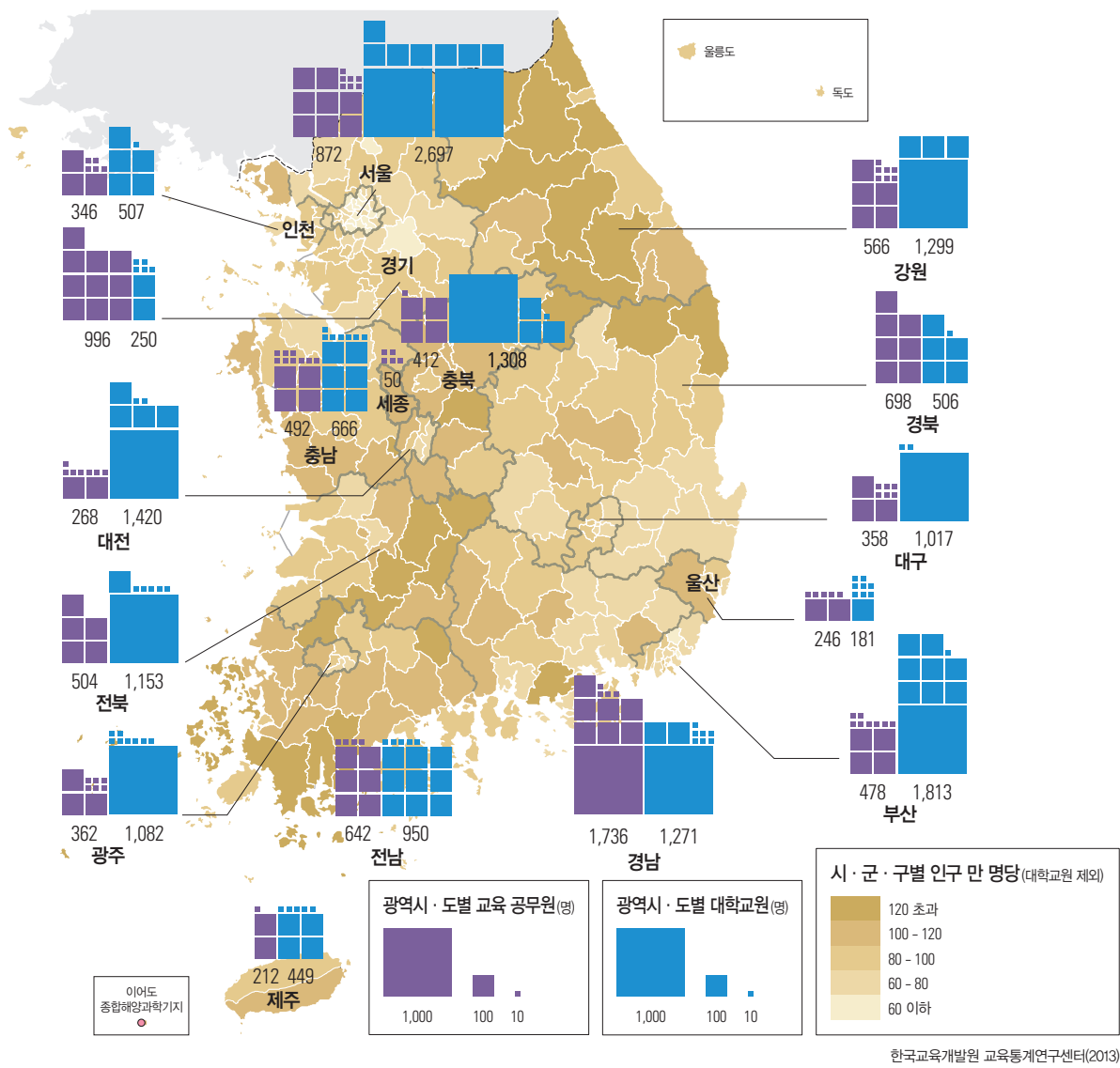


행정부 국가 공무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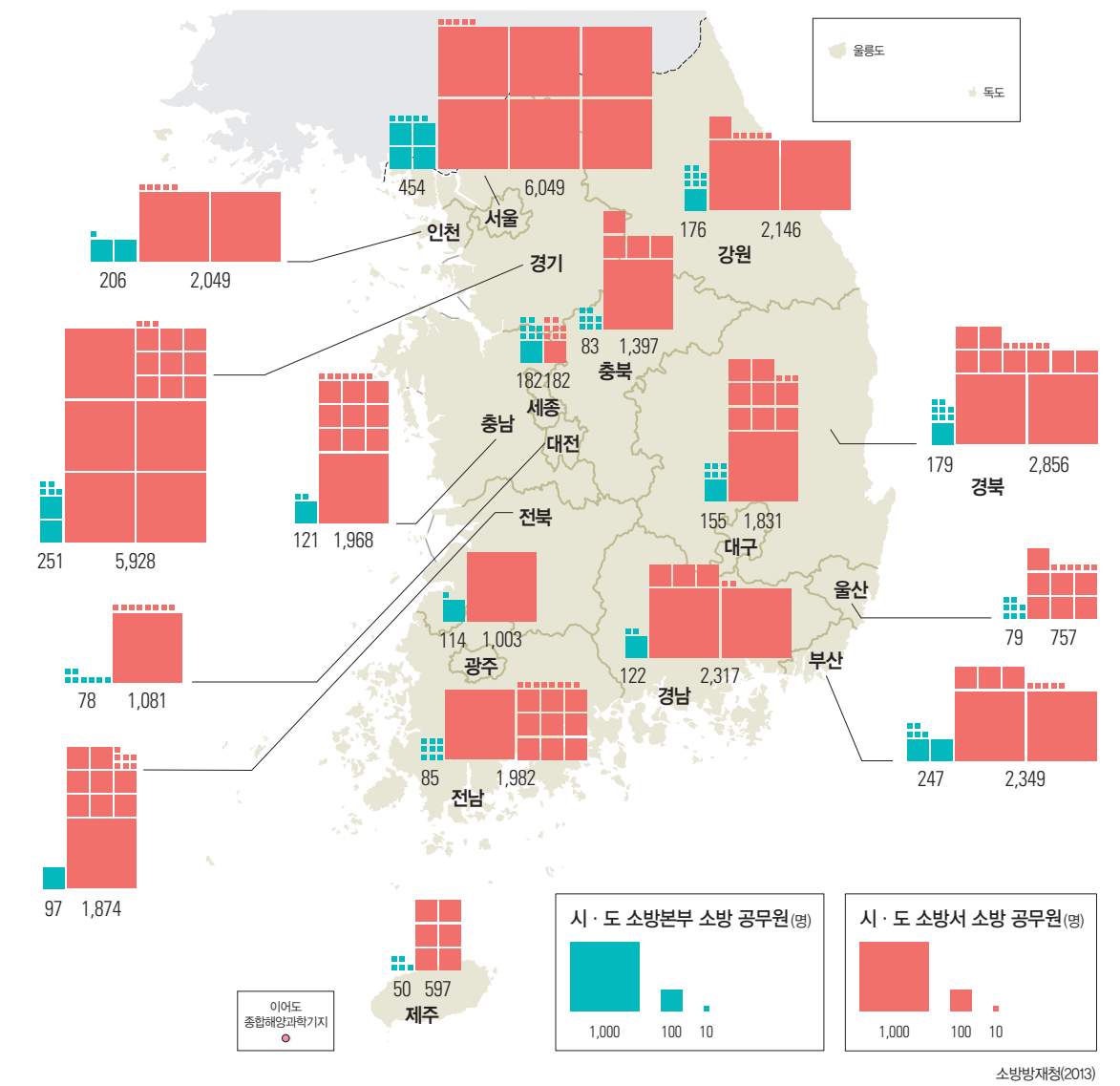
| | | |
|---|----------------|----------|
|  | 기획재정부 | 963명 |
|  | 교육부 | 352,538명 |
|  | 미래창조과학부 | 33,285명 |
|  | 외교부 | 2,483명 |
|  | 통일부 | 515명 |
|  | 법무부 | 21,071명 |
|  | 국방부 | 935명 |
|  | 행정자치부(구 안전행정부) | 3,314명 |
|  | 문화체육관광부 | 2,705명 |
|  | 농림축산식품부 | 3,213명 |
|  | 산업통상자원부 | 1,257명 |
|  | 보건복지부 | 3,023명 |
|  | 환경부 | 1,856명 |
|  | 고용노동부 | 5,747명 |
|  | 여성가족부 | 234명 |
|  | 국토교통부 | 3,899명 |
|  | 해양수산부 | 3,807명 |
| | 기타 국가 공무원 | 174,881명 |

주: 행정자치부 인원은 2013년 안전행정부 인원을 기준으로 함. 안전행정부(2014.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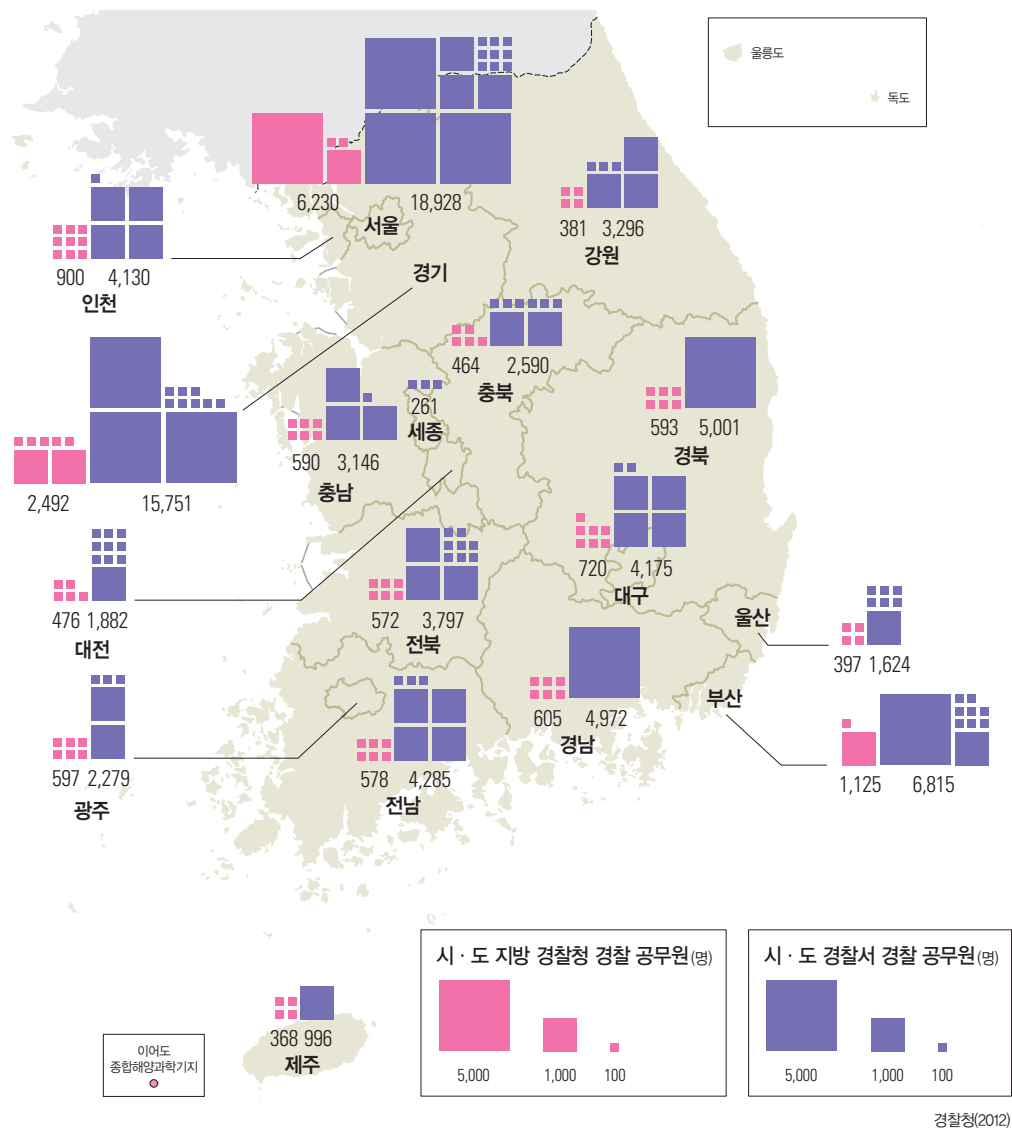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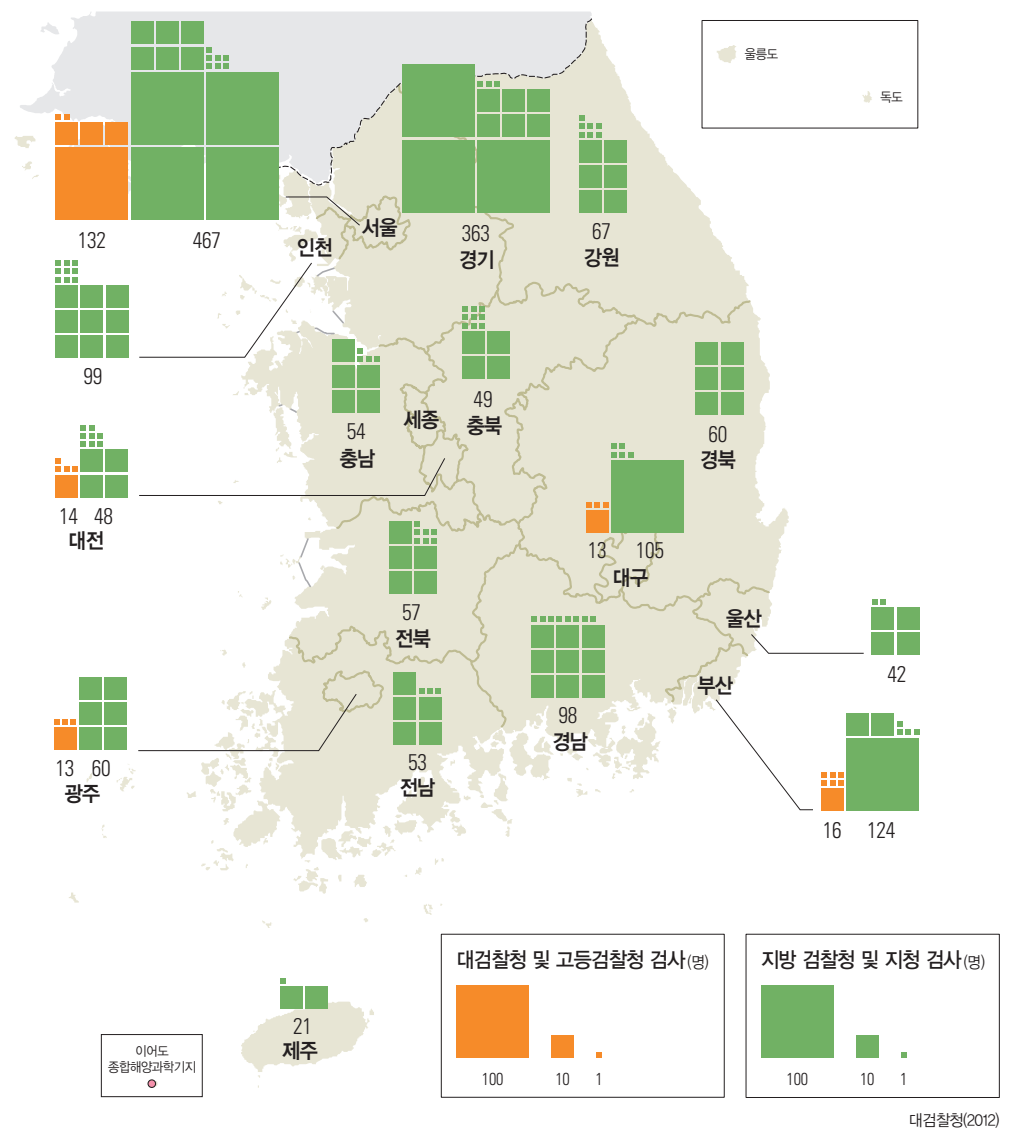
소방



경찰



검사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경찰 공무원·소방 공무원·교육 공무원·외무 공무원·법관, 검사, 군인, 군무원 등), 기능직 공무원, 기타 공무원(별정직, 계약직, 고용직)으로 나눌 수 있다. 특정직 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법」이외의 독립적인 법령에 따라 범위·임용·기능·지위 등의 세부 사항이 보장되어 있다.

교육 공무원의 범위는「교육공무원법」2조 1항에 따라 교육 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교육 행정 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교육 기관 및 교육 행정 기관 또는 교육 연구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이다. 2013년 현재 교육 공무원은 전체 346,448명이다(안행정부, 2014). 교원은 대학교원과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소속 교원으로 분류된다.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소속 교원은 인구 만 명당 전국 평균 78.9명, 대학교원은 4.5명이며, 교원을 제외한 교육 공무원은 1.1명이다.

경찰 공무원은 2006년 자치 경찰제도의 시행으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나누어진다. 경찰 공무원은 2012년 기준 국가직 110,284명, 지방직 127명으로 총 110,4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경찰청, 2013). 시·도 경찰서 경찰 공무원은 전국 평균 4,936.9명이다. 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경

기도,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이다. 지방 경찰청 경찰 공무원은 전국 평균 1,068명(세종특별자치시 제외)이다. 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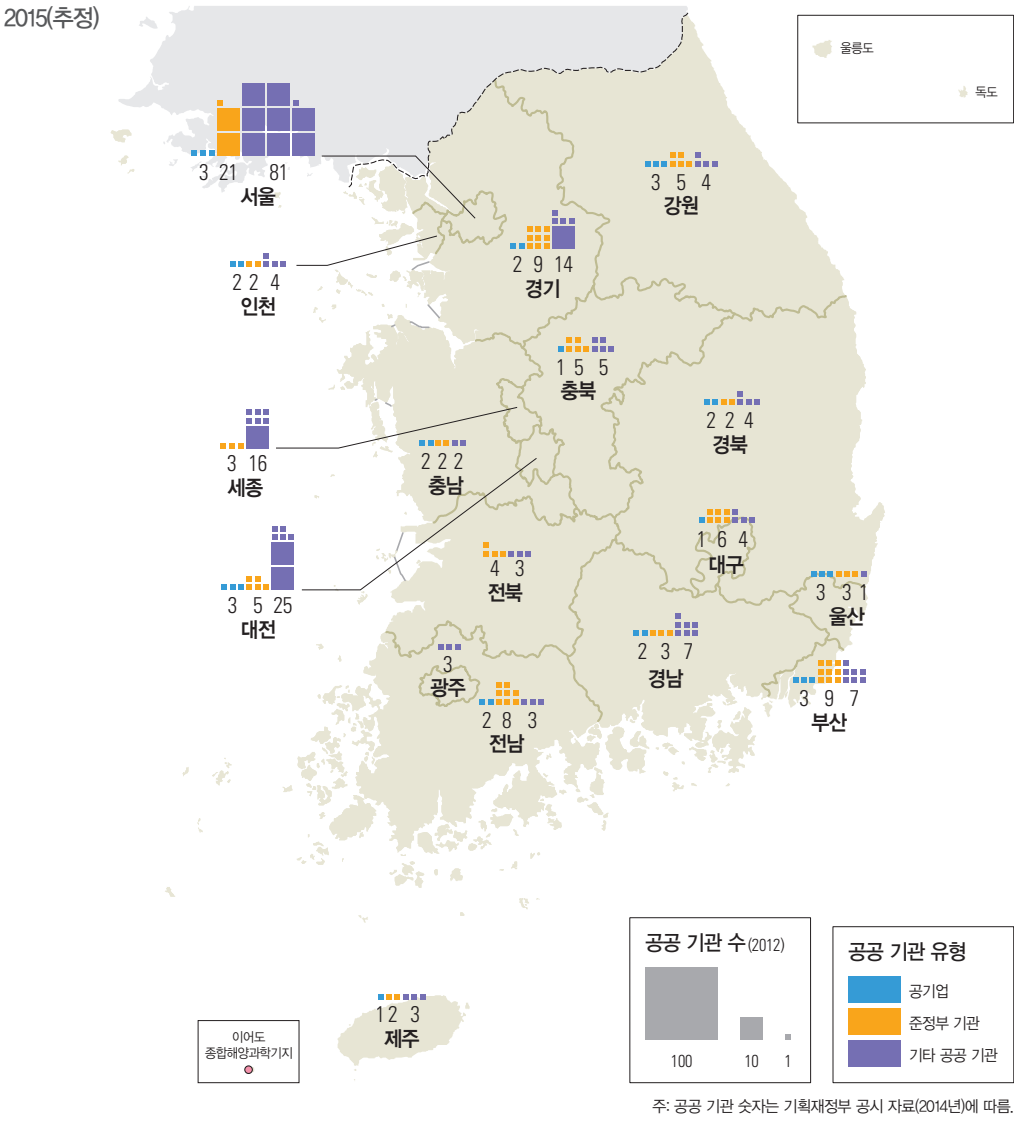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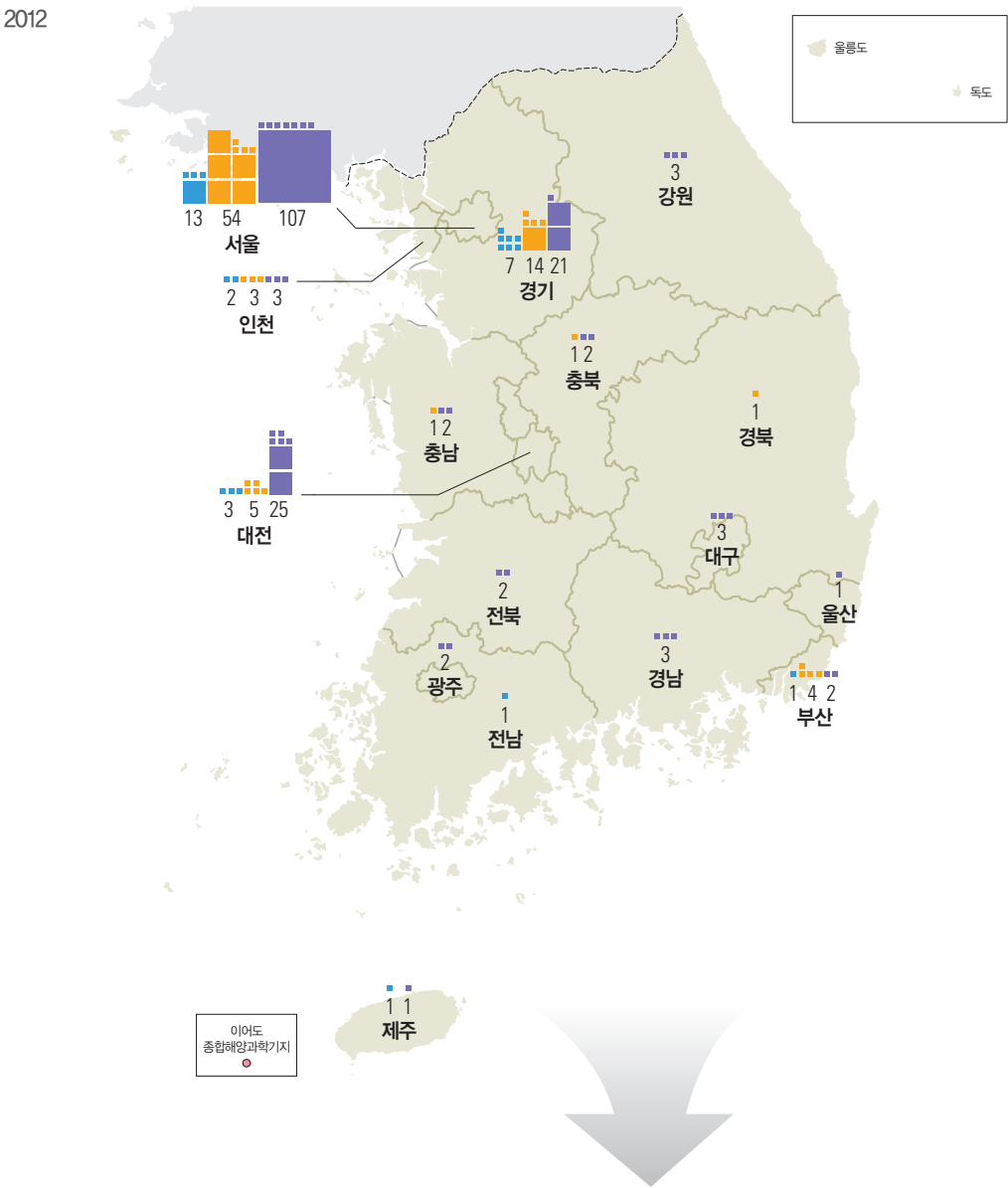
소방 공무원은 2013년 현재 소방방재청과 중앙119구조단 등 국가 공무원 322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용하는 지방 공무원 39,197명으로 이루어져 있다(소방방재청, 2014). 소방본부 소방 공무원은 전국 평균 157.6명이다. 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경기도·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상북도·강원도이다. 소방서 소방 공무원은 전국 평균 2,139.2명이다. 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경기도·경상북도·부산광역시·경상남도·강원도 등이다.

검사는 법무부 검찰청 소속으로 검사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 등의 세부 사항은「검찰청법」에 근거한다. 2012년 기준 검사는 총 2,012명이다(대검찰청, 2013). 대검찰청 및 고등검찰청 검사는 대검찰청(서울특별시 소재) 및 고등검찰청(서울특별시·대전광역시·광주광역시·대구광역시 소재) 소속 검사로, 이들 지역에 188명이 있다. 지방 경찰청 및 지청 검사는 전국 평균 103.9명이다. 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경기도·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 등이다.

공공 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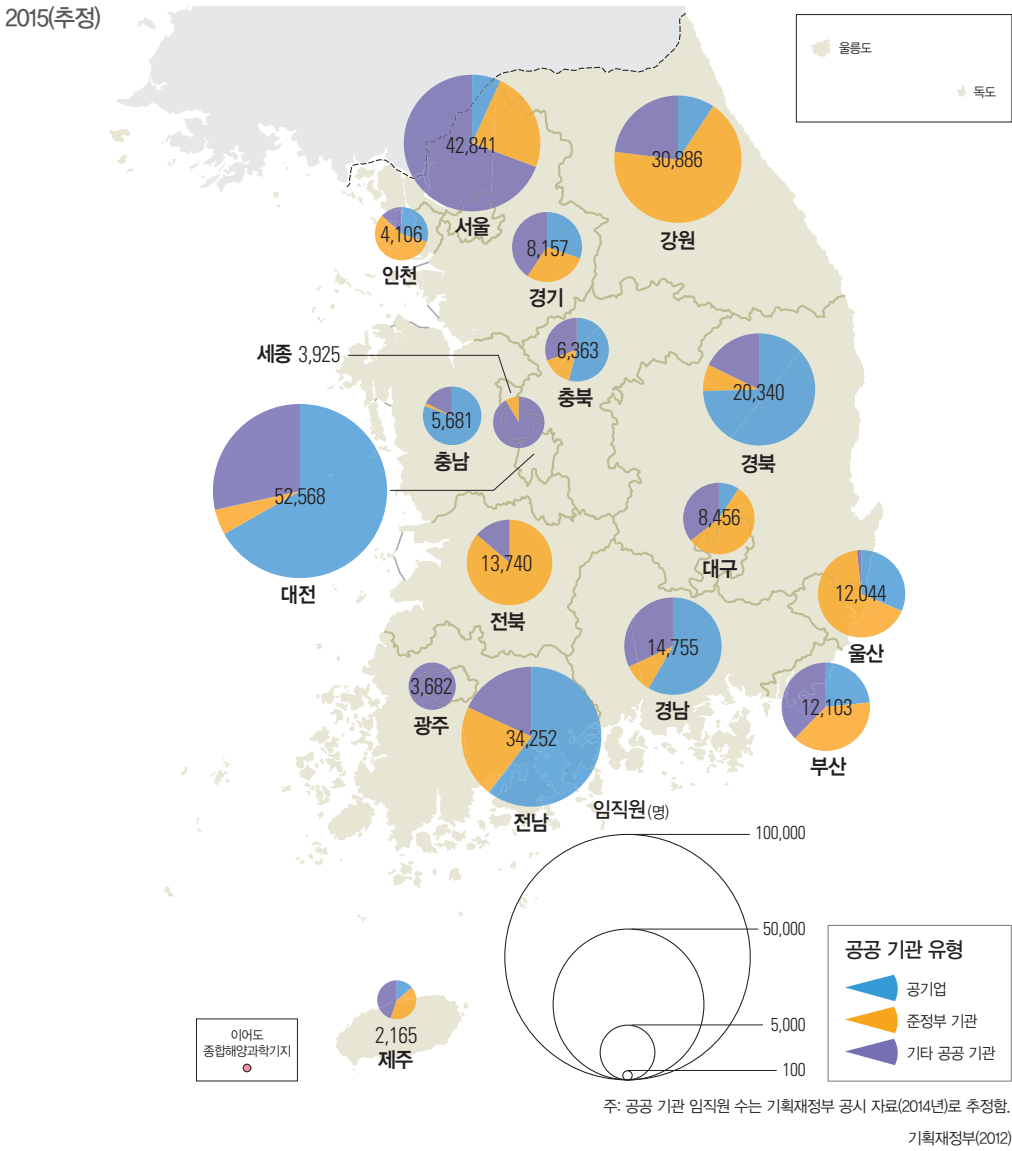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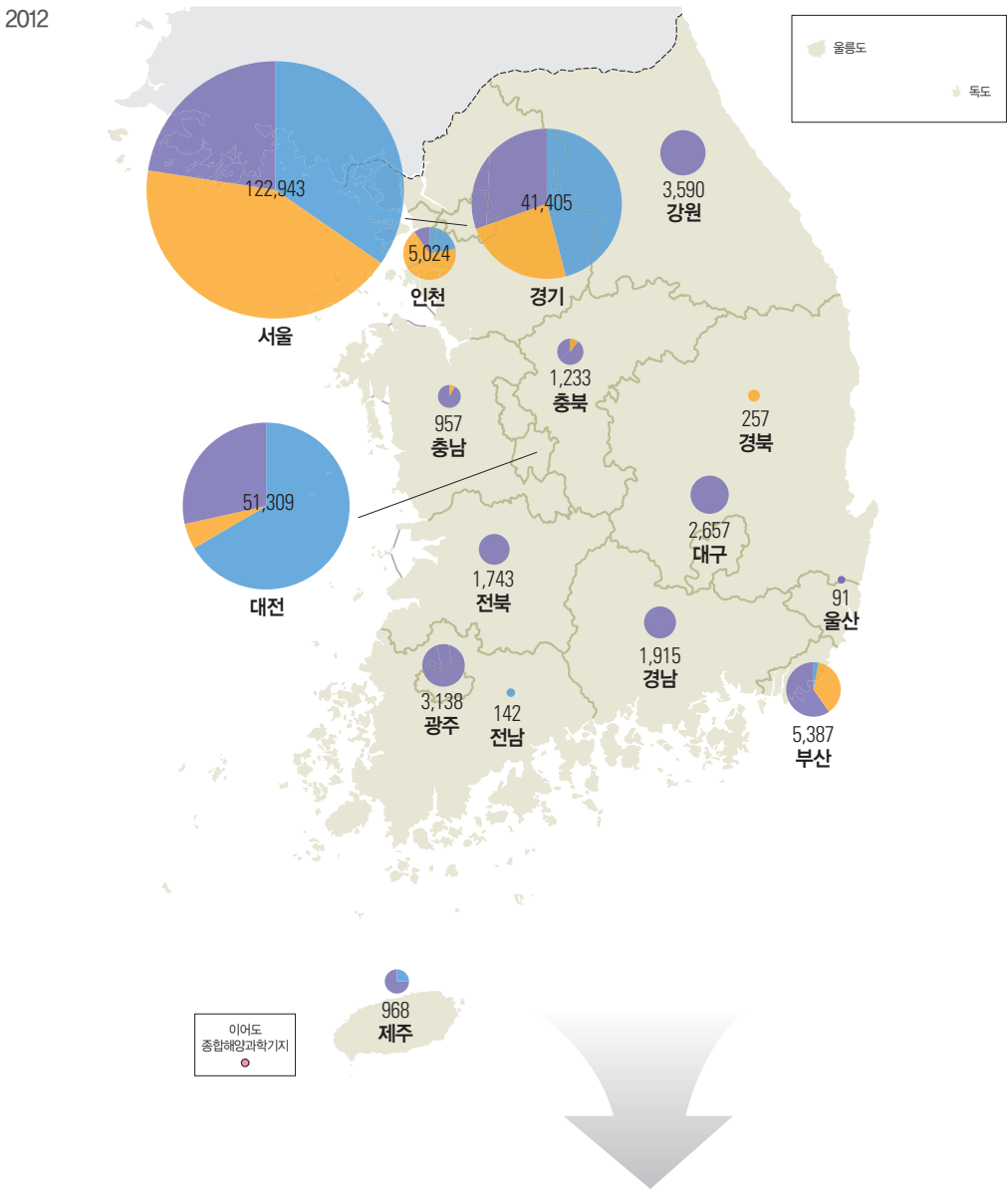
분포



공공 기관은 유형별로 공기업(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준정부 기관(자금 관리형 준정부 기관, 위탁 집행형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 기관으로 구분된다. 이중 공기업이 9.7%(28개), 준정부 기관이 28.8%(83개), 기타 공공 기관이 61.5%(177개)를 차지하고 있다. 공공 기관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가 전체의 60.4%(174개)를, 경기도가 14.6%(42개)를, 인천광역시가 2.8%(8개)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에 77.8%(224개)가 입지하고 있다. 한편, 대전광역시

(11.5%)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공공 기관 입지 비중은 3.0% 미만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의 발전 전략을 토대로 경제 발전을 이루어왔으나, 최근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방으로의 공공 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11월 30일 현재 이전 대상으로 지정된 공공 기관의 수는 154개이다. 이들 공공 기관은 10개 혁신 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개별 이전 지역으로 이전

임직원 수



신 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개별 이전 지역으로 이전한다. 혁신 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부산은 해양·금융·영상, 대구는 의료·교육, 광주·전남은 에너지(전력)·농생명·정보 통신, 울산은 에너지(정유)·근로 복지, 강원은 건강·관광·자원 개발, 충북은 에너지(태양광)·교육·R&D, 전북은 국토 개발·농생명, 경북은 첨단 교통·농생명, 경남은 바이오·세라믹, 제주는 관광·교육 학습 등으로 특화된다. 2014년 11월 현재 73개 공공 기관의 이전이 완료되었으며, 2015년에 대부분 공공 기관의 이전이 완료될 예정이다. 2012년 공공 기관 분포와 2015년 공공 기관 예상 분포는 수도권 중심의 일극 구조에서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다극화 구조로 변경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에 따르면 공공 기관의 수도권 분포 비율이 77.8%(전체 288개 중 224개)에서 45.6%(전체 302개 중 138개)로 대폭 감소하고, 지방의 공공 기관의 수는 골고루 늘어나게 된다.

사법부

사법부는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기관으로서, 대법원 및 대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기관을 통틀어 이른다. 사법부의 조직 체계는 대법원 산하에 고등법원, 고등법원 산하에 지방법원, 가정법원, 지방법원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등법원 산하 법원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분포되어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민사, 형사, 가정 소송을 진행하는데 왕래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특수법원으로서 대법원 산하에 특허법원이 있다.

대법원은 삼급 제도의 최고 법원으로서 상고 사건과 재항고 사건을 최고심으로 판단하고, 1회의 재판으로 끝

나는 단심 사건의 관할 법원이며, 대법원의 거의 모든 사건은 상고심에 해당한다. 이렇듯 최고 법원으로서 최종 심판권을 가지는 대법원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관한 소송과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및 당선요격에 관한 소송 등에 대한 전속 관할권을 가진다. 또한 대법원은 명령과 규칙의 위헌 심판, 각급 법원 판결의 위헌 심판 등을 통해 헌법 재판권도 갖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원장(재판장)과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어 출석 과반수 의견에 따라 심판하는 전원 합의제와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되어 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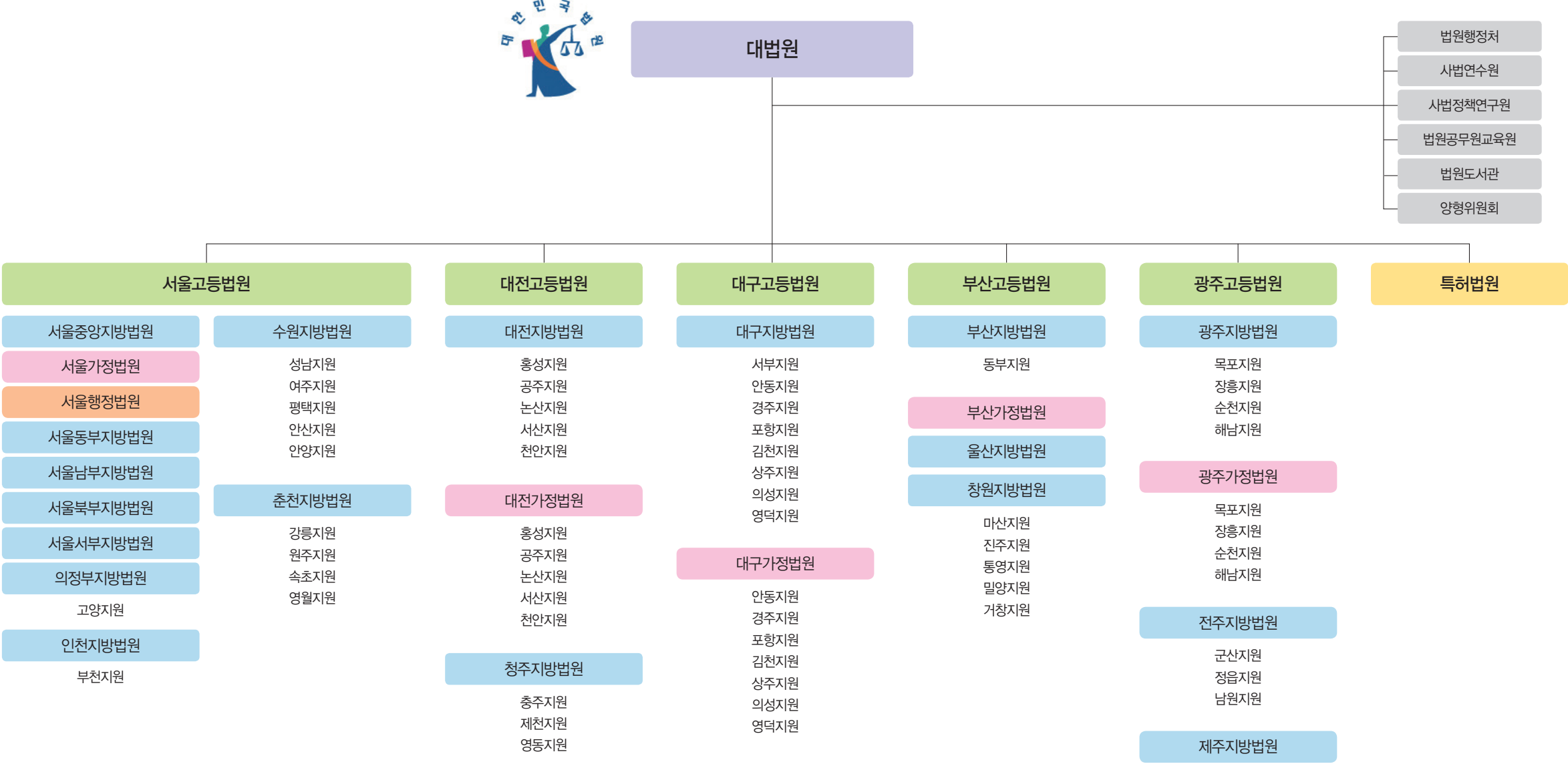
의견 일치에 따라 재판하는 부에 의해 행사된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또한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대법원 산하에는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등의 기관과 양형위원회를 두고 있다.

사법 행정은 전체 법원의 조직, 인사, 예산, 회계, 시설 관리 등과 같이 사법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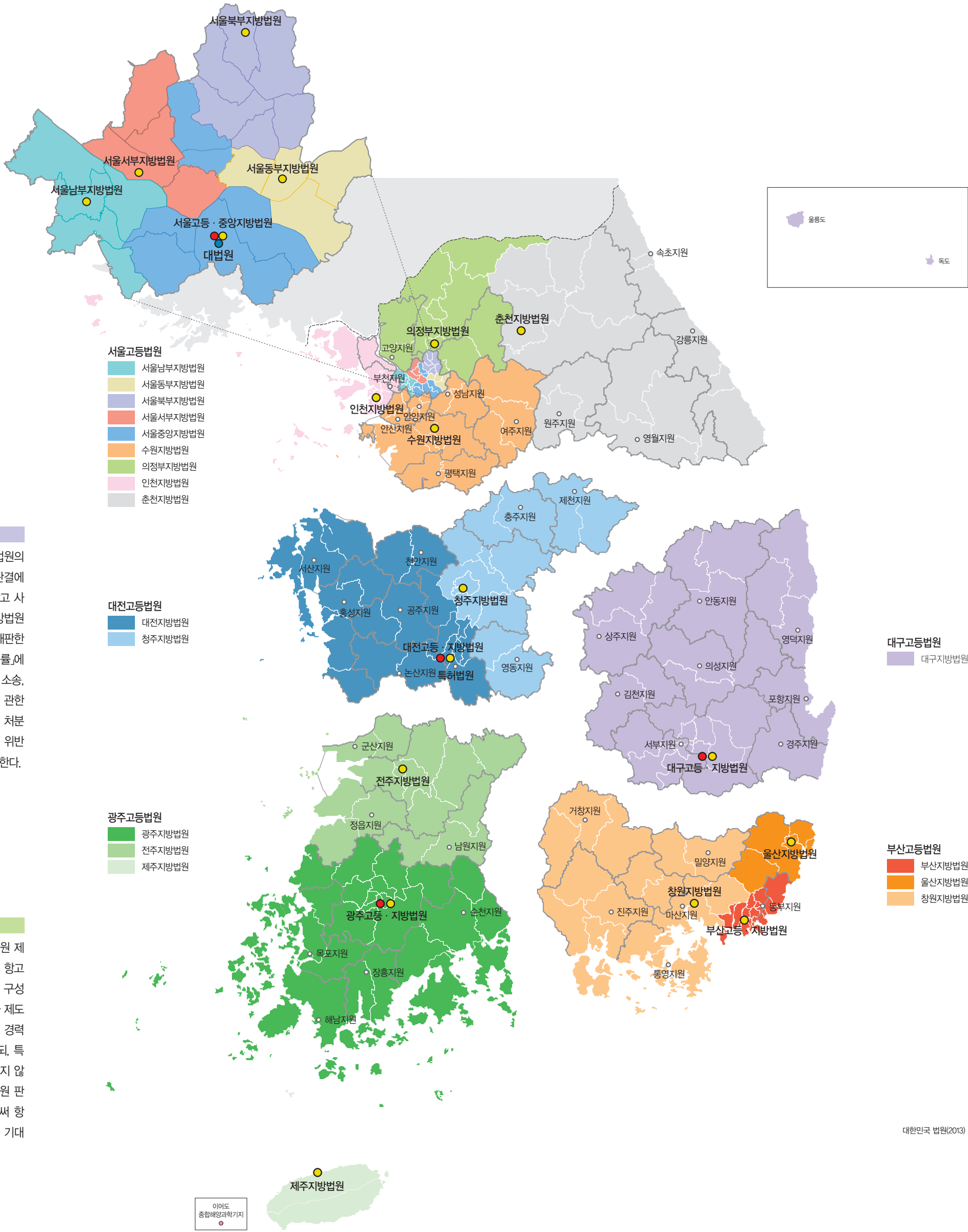
활동이다. 대법원장은 사법 행정 사무를 총괄하고, 사법 행정 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특히 대법원장은 사법 행정 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의 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또는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대법관 중 1인이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고, 법원의 사법 행정 사무를 감독한다. 중요한 사법 행정 사무에 관해서는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사법부 조직도



사법부의 구성

전국 법원의 분포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또는 가정법원의 민사·형사·행정·특허 및 가사 사건 판결에 대한 상고 사건과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중심으로 심판하고, 특별한 경우 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에 대한 비상 상고 사건도 재판한다. 「해양 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및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에 관해 전속 관할한다. 명령·규칙·처분 또는 행정 기관의 조치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지에 대한 최종적인 심사 권한을 보유한다.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 제1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 사건을 심판한다.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의 시행으로 고등법원 판사는 상당한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아 임명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법원으로 전보되지 않고 고등법원에서만 근무한다. 이는 고등법원 판사의 경력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항소심 재판이 더욱 충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지방법원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기본적으로 민사 및 형사 사건을 제1심으로 재판한다. 제1심 재판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심판하지만, 특히 중요하다고 법률이 정하고 있는 사건들은 합의부가 심판한다. 현재 전국에 18개의 지방법원이 있으며, 관할 구역 내에 지원과 시·군법원 등을 둘 수 있다. 현재 전국에는 40개의 지원이 있다.

가정법원

지방법원과 동급 법원으로서, 가사 사건과 소년 보호 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963년에 설치하였다.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의 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지원이 그 역할을 한다. 1998년부터는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과 더불어 가정 폭력 사건에 대한 심판권도 보유한다. 가사 사건은 법관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담당하고, 소년 보호 사건, 가정 보호 사건은 단독판사가 담당한다.

행정법원

1998년 서울에 처음 설치되었다.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행정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이를 관할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조세, 토지 수용, 근로, 일반 행정 등의 사건을 심판한다. 과거에는 행정적 구제 절차를 모두 거쳐야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행정법원 설립에 따라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행정 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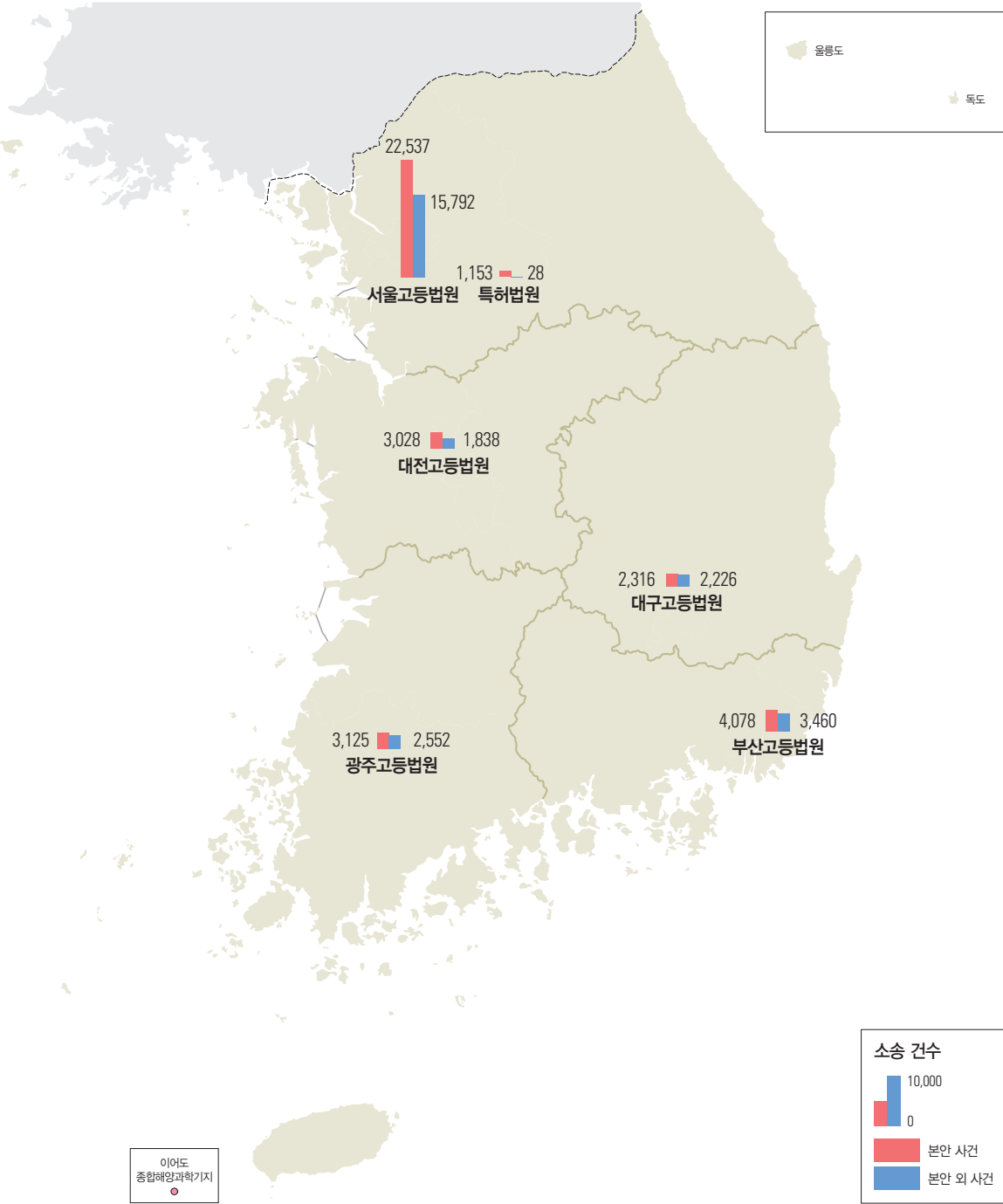
특허법원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1심으로 맡는 고등법원급 법원으로, 그 판결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한다. 자연 과학이나 공학을 전공한 기술심리관을 전문 기술 분야별로 배치하여 특허 및 실용신안 사건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재판부의 이해와 판단을 보조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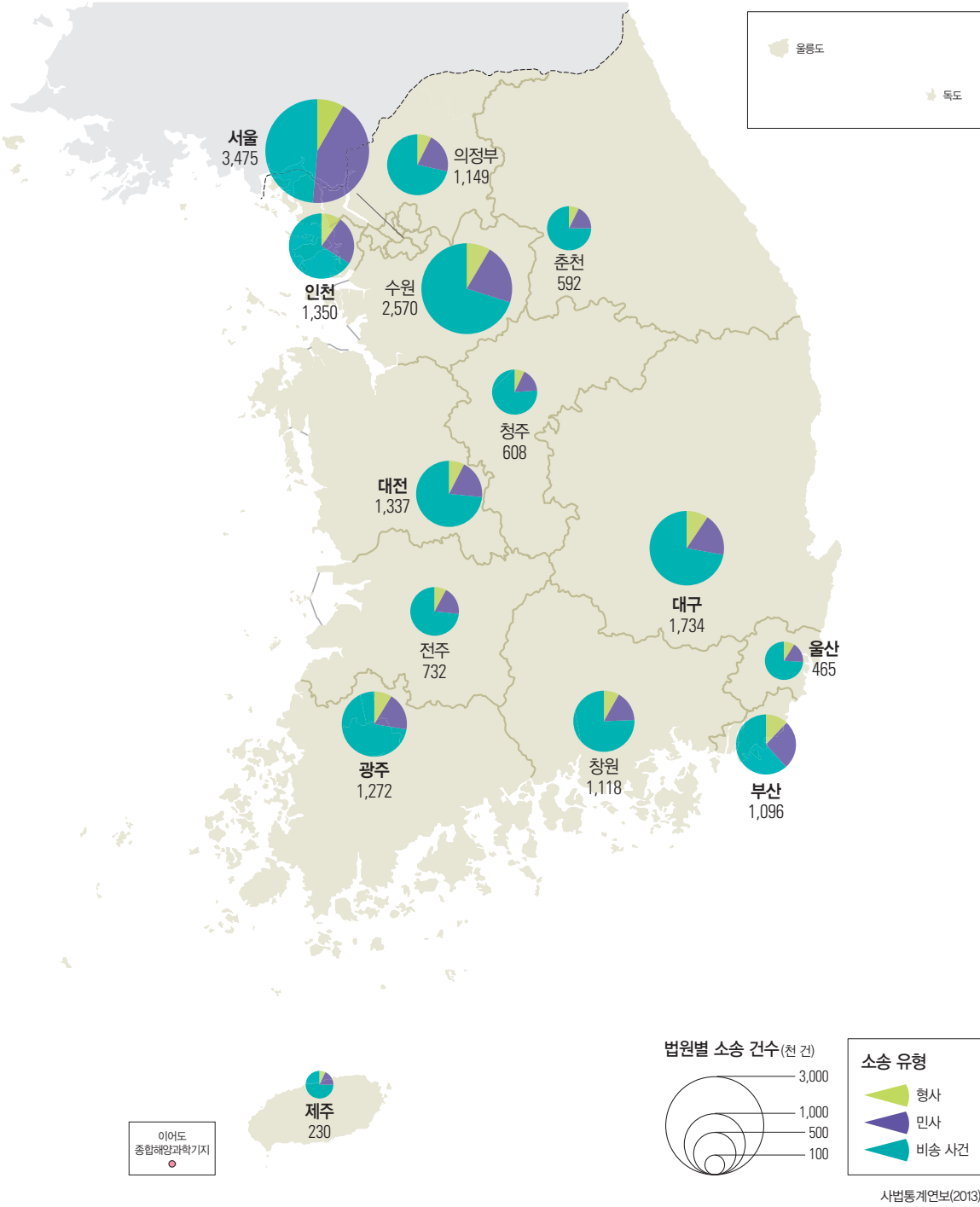
대한민국 법원(2013)

사법 실무

고등법원별 소송 사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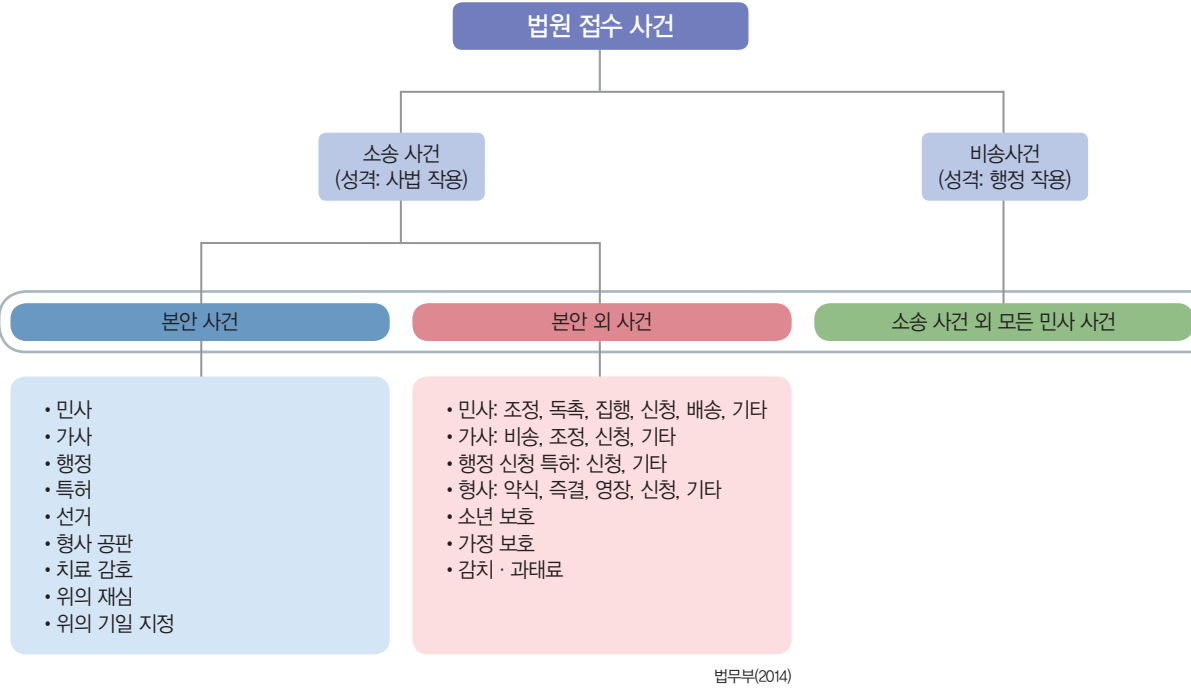


지방법원별 소송 사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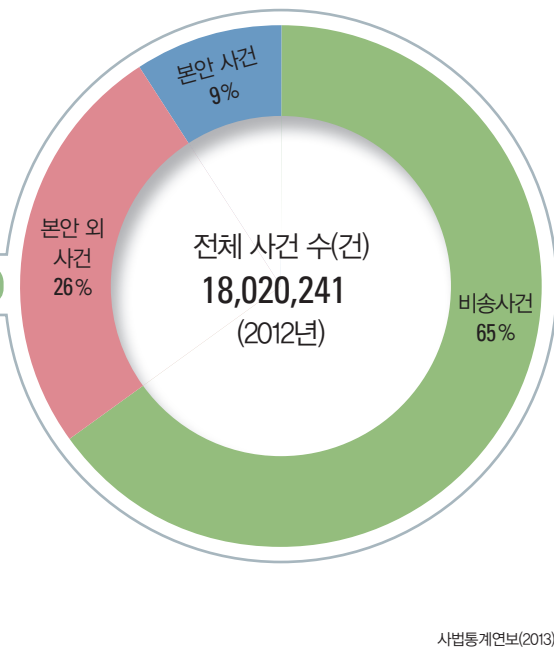


민사 재판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재산권이나 법률 관계에 대한 분쟁에 관한 재판이다. 2001년 '새로운 사건 관리 방식', 2002년 신 「민사소송법」, 2008년 변론 기일 중심의 민사 소송 절차를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 등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보장과 사건의 적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민사 재판과 관련하여, 1, 2, 3심의 절차 외에도, 소액 사건 심리 절차, 민사 조정 절차, 민사 집행 절차, 재산 명시 및 재산 조회, 가압류 및 가처분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형사 재판은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형벌을 가하는 재판이다. 법원은 형사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 및 기소 절차, 공판 절차,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체포와 구속 적부심사 및 보석, 피고인의 자백의 증거 능력, 유·무죄 판결, 항소 및 상고 절차, 즉결 심판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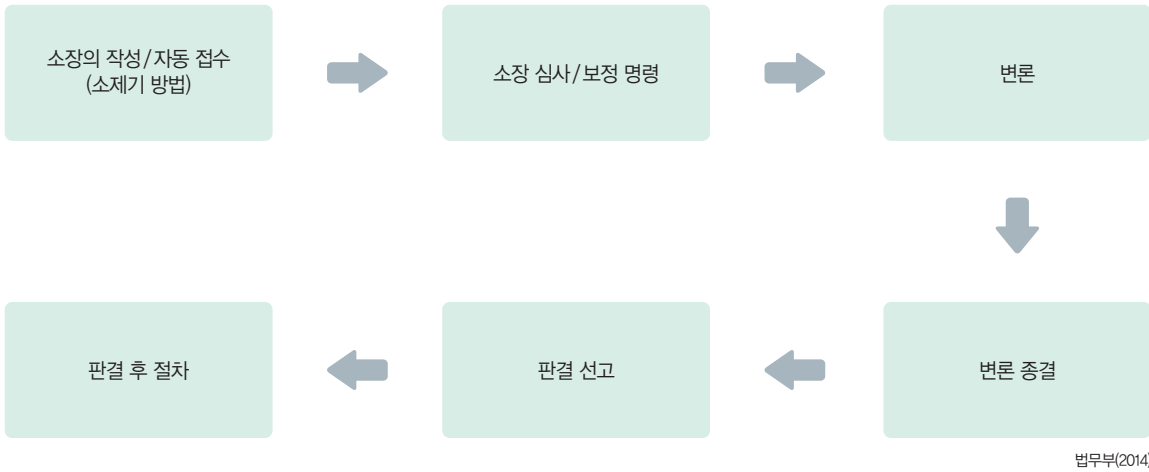
법원 접수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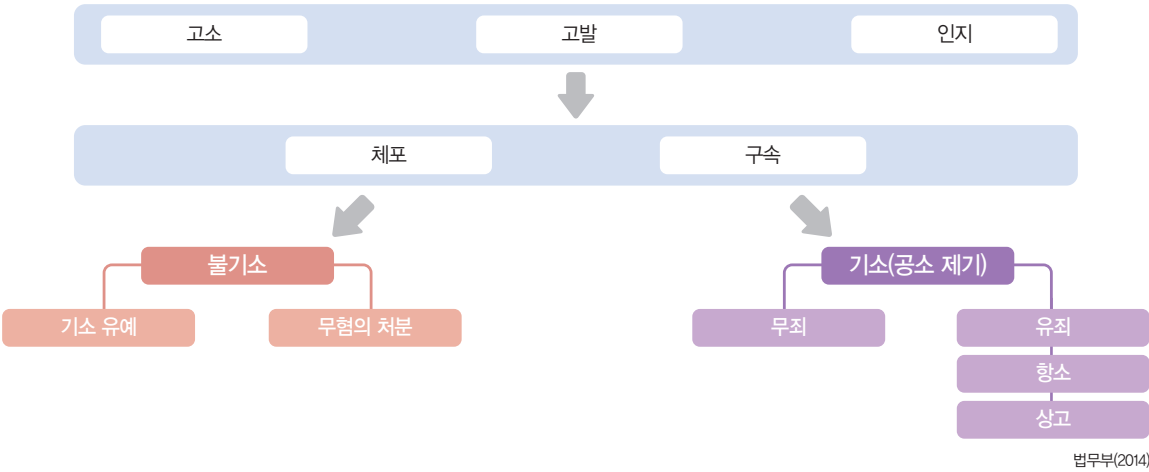
사건 유형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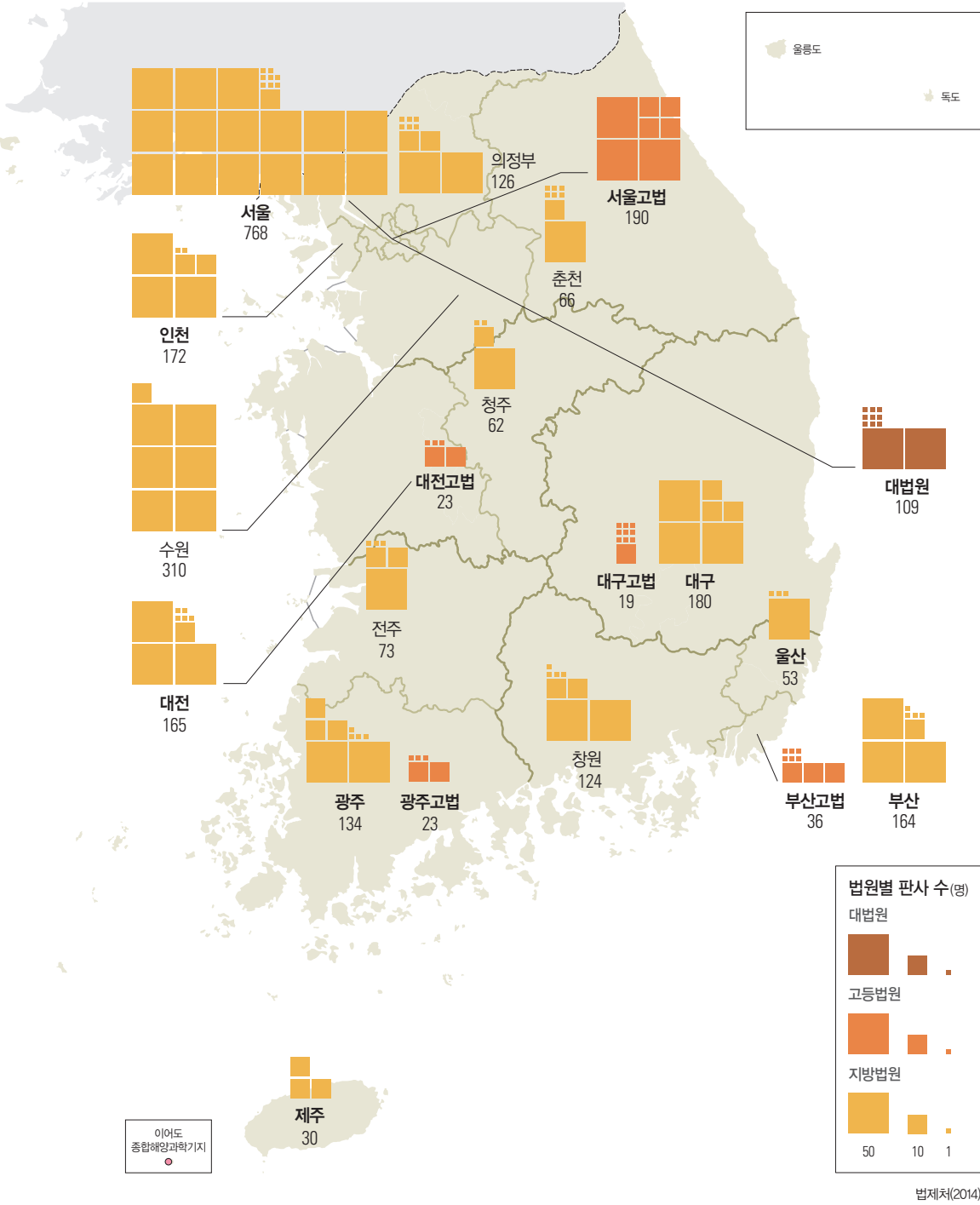
민사 소송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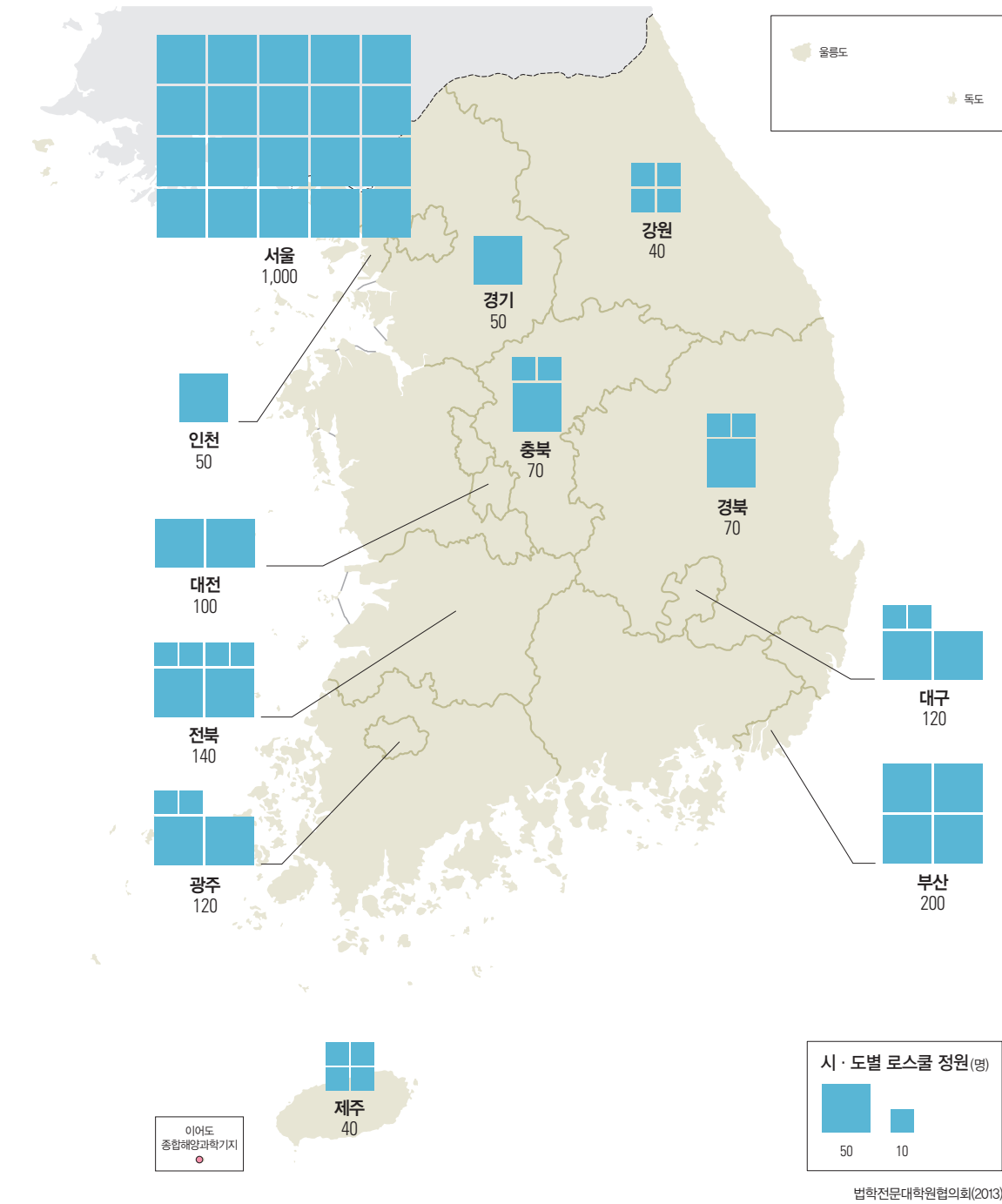
형사 소송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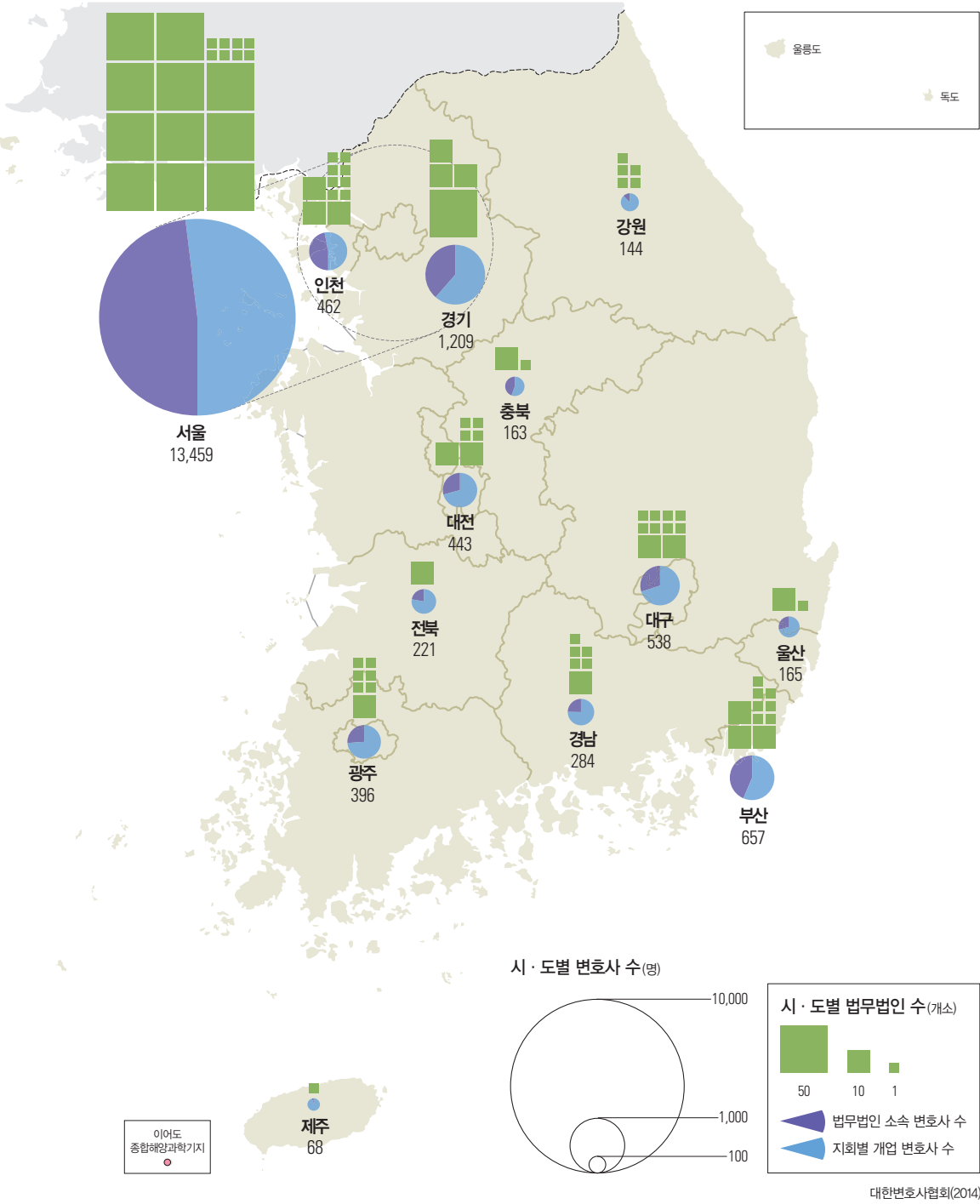
법률 서비스
법원별 판사 수



시·도별 로스쿨 정원



시·도별 법무법인과 변호사 수



법원은 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법적 분쟁을 심판한다. 또한 법원은 분쟁에 대한 심판 권한 이외에 부동산 및 등산·채권 담보 등기, 가족 관계 등록, 공탁, 집행관 및 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또는 감독할 권한을 가진다.

법원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인 재판은 단독판사나 3인의 법관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진행된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원칙적으로 공개되며, 법정에서 재판은 국어로 진행된다. 군사법원을 제외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법관이 담당한다. 법관인 판사 임용은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임용했던 기존의 즉시 판사 임용 제도가 없어지고, 2013년부터 최소 3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 가운데 판사를 임용하는 새로운 법관 임용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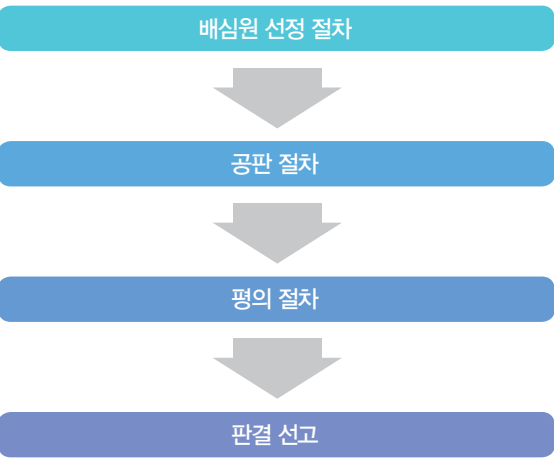
한편 2008년부터 국민 참여 재판이 시행되면서 일반 국민도 형사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 참여 재판은 배심제와 참심제의 양 요소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절히 수정·보완한 독자적인 제도이다. 국민 참여 재판의 특징을 보면, 배심원이 법관과 독립하여 평결하지만, 유·무죄에 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증거 관계 등에 관하여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시 평결하고 그래도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다수결로 평결하는 점, 배심원들은 유·무죄에 관한 평결 외에 양형에 관해서도 의견을 개진하는 점, 법관은 배심원의 평결이나 양형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현재 국민 참여 재판은 형사합의부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진행된다.

법원은 부동산 등기, 등산·채권 담보 등기, 선박 등기 등 등기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 기관이며, 법원 중에서 지방법원과 동 지원이 그 관할 구역 내의 등기 사무를 관장한다. 이는 등기 사무가 단순한 행정 민원 업무와는 달리

대립되는 이해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가 얽힌 준사법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지방법원은 그 관할 구역 내에서 등기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하부 기관으로서 등기소를 두고 있다. 등기소는 상등 등기, 부동산 등기, 선박 등기 등의 등기 신청 사건 처리, 등기 사항 증명서의 발급, 인감 증명 업무를 하며 그 밖의 일정한 사문서에 대한 확정 일자 부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법원은 또한 호주제를 대체하는 가족 관계 등록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가족 관계 등록 제도는 국민의 신분 관계를 호주 중심으로 편제하였던 호적 제도와 달리, 국민의 신분 관계를 개인별로 가족 관계 등록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록하여 이를 공시하는 제도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가족 관계 등록 사무(중전 호적 사무)를 국가 사무화하였고, 이에 따라 대법원을 가족 관계 등록 사무의 관장자로 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등록 사무를 관장하더라도,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대법원은 시·(구)·읍·면의 장에게 등록 사무를 처리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국민 참여 재판의 흐름



지방자치와 지방 분권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 내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중앙 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해서 지역 자체의 정치 및 행정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오늘날 글로벌 시대를 맞아 지역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 지역 간 균형 발전 및 주민 밀착 행정 수요의 증대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는 일정한 범위를 가진 지역과 주민,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주민 참여, 지방 사무, 자치권 및 자주 재원 등을 주요 구성 요소로 갖는다. 특히 최근에는 지방 사무, 자치권 및 자주 재원 등 지방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지방 분권의 흐름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삶과 보다 직결되어 있는 행정 조직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주민들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구성된 단체를 의미하고, 공적 법인으로서 자격을 가지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등 광역 단위 지방자치단체와 시·군·구(자치구) 등 기초 단위 지방자치단체 등 두 가지 범주의 일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자치에 필수적인 주민 참여를 위한 대표적 수단이 바로 선거 참여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소를 소유한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되며,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결 기관인 지방의회 의원과 집행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지방 선거 참여 권리를 갖는다. 지방 선거의 결과에 따라 광역 및 기초 단위 지방의회가 구성되며, 아울러 서울특별시장, 광역

시장, 도지사, 군수, 자치구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도 함께 선출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하여 주민 투표에 부칠 수 있고, 주민은 투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권리도 갖는다.

지난 30년 간 유보되었다가 1991년 지방의회의 구성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방자치 시대를 거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권한은 계속 확대되어 왔다. 주요 업무 내용을 보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 관리, ② 주민의 복리 증진, ③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 ④ 지역 개발과 주민의 생활 환경 시설의 설치·관리, ⑤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⑥ 지역 민방위 및 지방 소방 등에 관한 사무가 있다.

2014년 우리나라에는 1개 특별시(서울), 6개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1개 특별자치시(세종), 8개 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개 특별자치도(제주) 등 총 17개 광역 단위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아울러 그 아래 77개 시(2개 행정시 포함), 83개 군, 102개 구(33개 자치구가 아닌 구 포함) 등이 있으며, 그 아래 가장 낮은 행정 단위로서 216개 읍, 1,196개 면, 2,076개 동 등이 있어 지방 행정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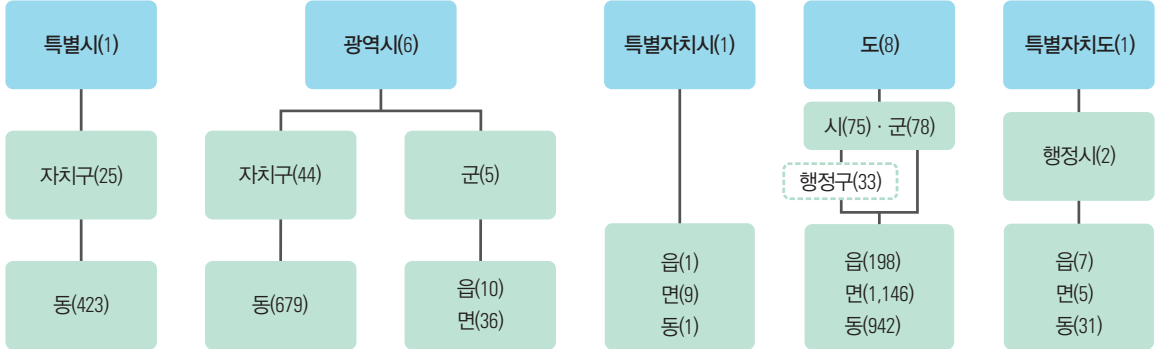
최근 정부는 현 지방 행정 체계가 급속한 행정 환경의 변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해 주민 불편이 심화되고 행정 효율이 저하되고 있다고 보고, 지방 분권, 시·군·구 통합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통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 구역 일반 현황

| 시·도별 | | 구분 | | | | 시·군·구 | | 행정시·행정구 | | 읍·면·동 | | | |
|-------|----|-----|----|----|----|-------|----|---------|-----|-------|-------|---|---|
| | | 계 | 시 | 군 | 구 | 시 | 구 | 시 | 구 | 계 | 읍 | 면 | 동 |
| 전국 | | 227 | 75 | 83 | 69 | 2 | 33 | 3,488 | 216 | 1,196 | 2,076 | | |
| 특별시 | 서울 | 25 | | | 25 | | | 423 | | | 423 | | |
| | 부산 | 16 | | 1 | 15 | | | 210 | 2 | 3 | 205 | | |
| 광역시 | 대구 | 8 | | 1 | 7 | | | 139 | 3 | 6 | 130 | | |
| | 인천 | 10 | | 2 | 8 | | | 147 | 1 | 19 | 127 | | |
| | 광주 | 5 | | | 5 | | | 95 | | | 95 | | |
| | 대전 | 5 | | | 5 | | | 78 | | | 78 | | |
| | 울산 | 5 | | 1 | 4 | | | 56 | 4 | 8 | 44 | | |
| 특별자치시 | 세종 | | | | | | | 11 | 1 | 9 | 1 | | |
| | 경기 | 31 | 28 | 3 | | | 20 | 550 | 32 | 108 | 410 | | |
| 도 | 강원 | 18 | 7 | 11 | | | | 193 | 24 | 95 | 74 | | |
| | 충북 | 12 | 3 | 9 | | | 2 | 153 | 15 | 87 | 51 | | |
| | 충남 | 15 | 8 | 7 | | | 2 | 207 | 24 | 137 | 46 | | |
| | 전북 | 14 | 6 | 8 | | | 2 | 241 | 14 | 145 | 82 | | |
| | 전남 | 22 | 5 | 17 | | | | 296 | 33 | 196 | 67 | | |
| | 경북 | 23 | 10 | 13 | | | 2 | 331 | 36 | 202 | 93 | | |
| | 경남 | 18 | 8 | 10 | | | 5 | 315 | 20 | 176 | 119 | | |
| | 제주 | | | | | 2 | | 43 | 7 | 5 | 31 | | |

안전행정부(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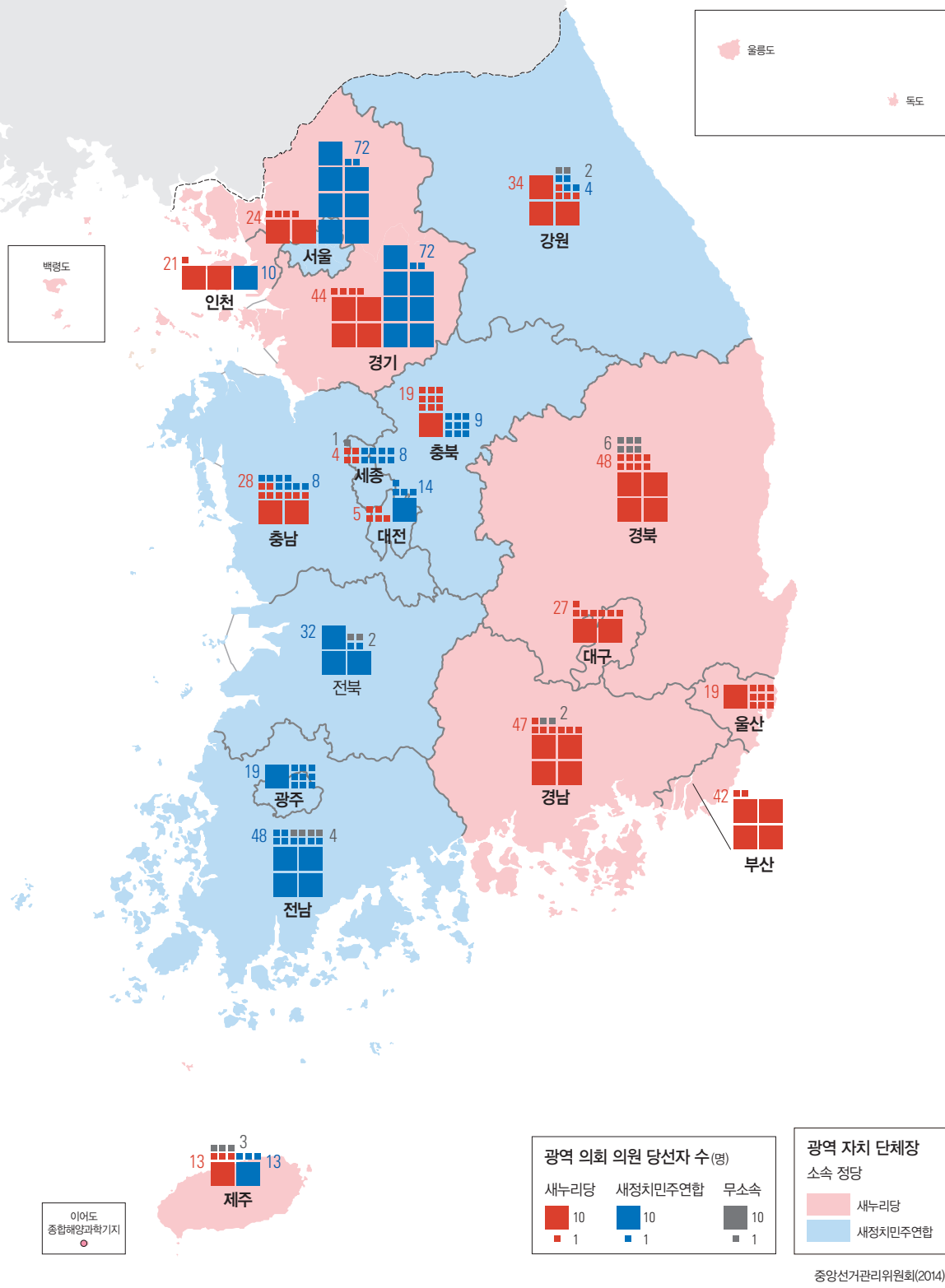
행정 구역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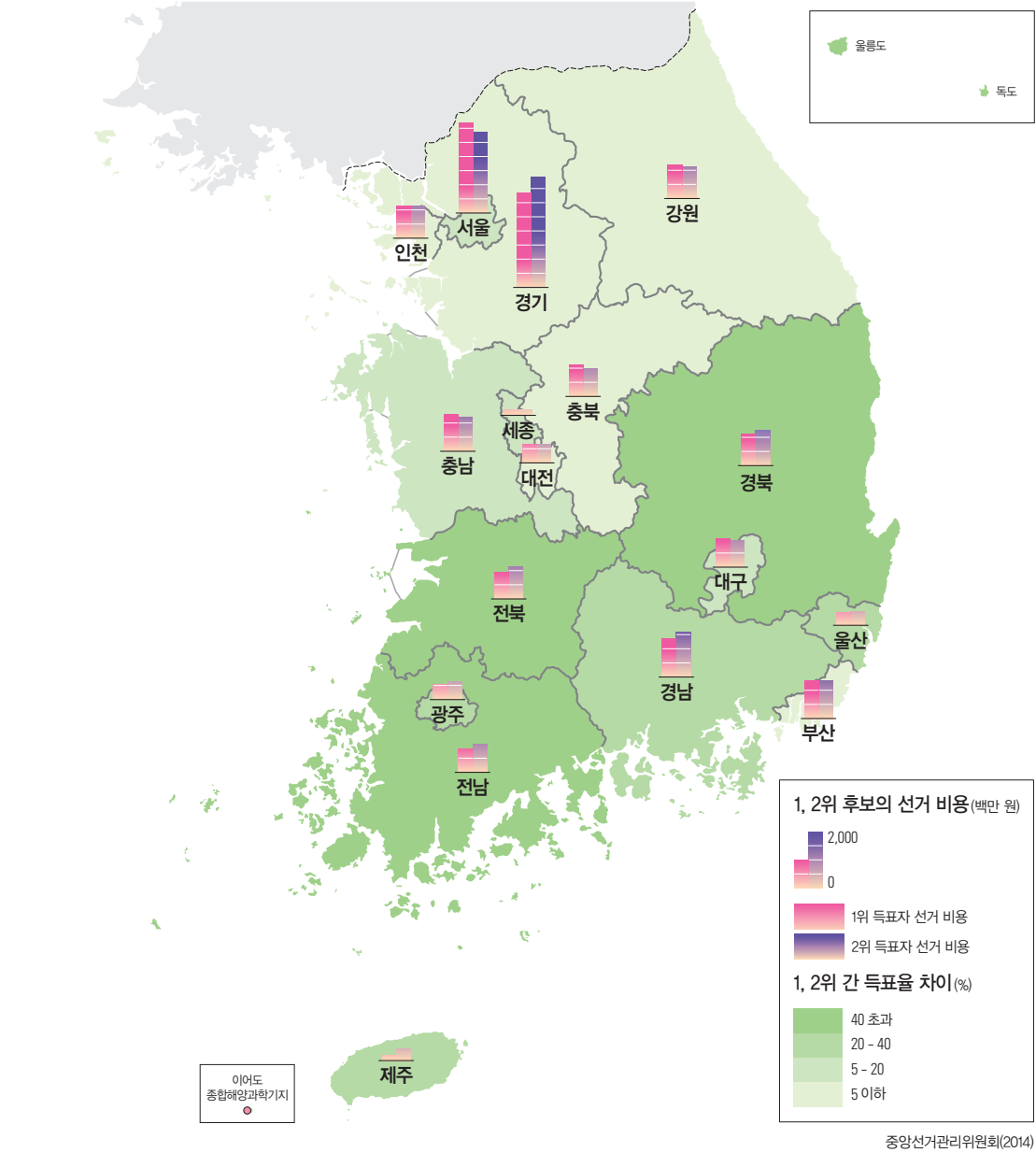
안전행정부(2014)

지방자치와 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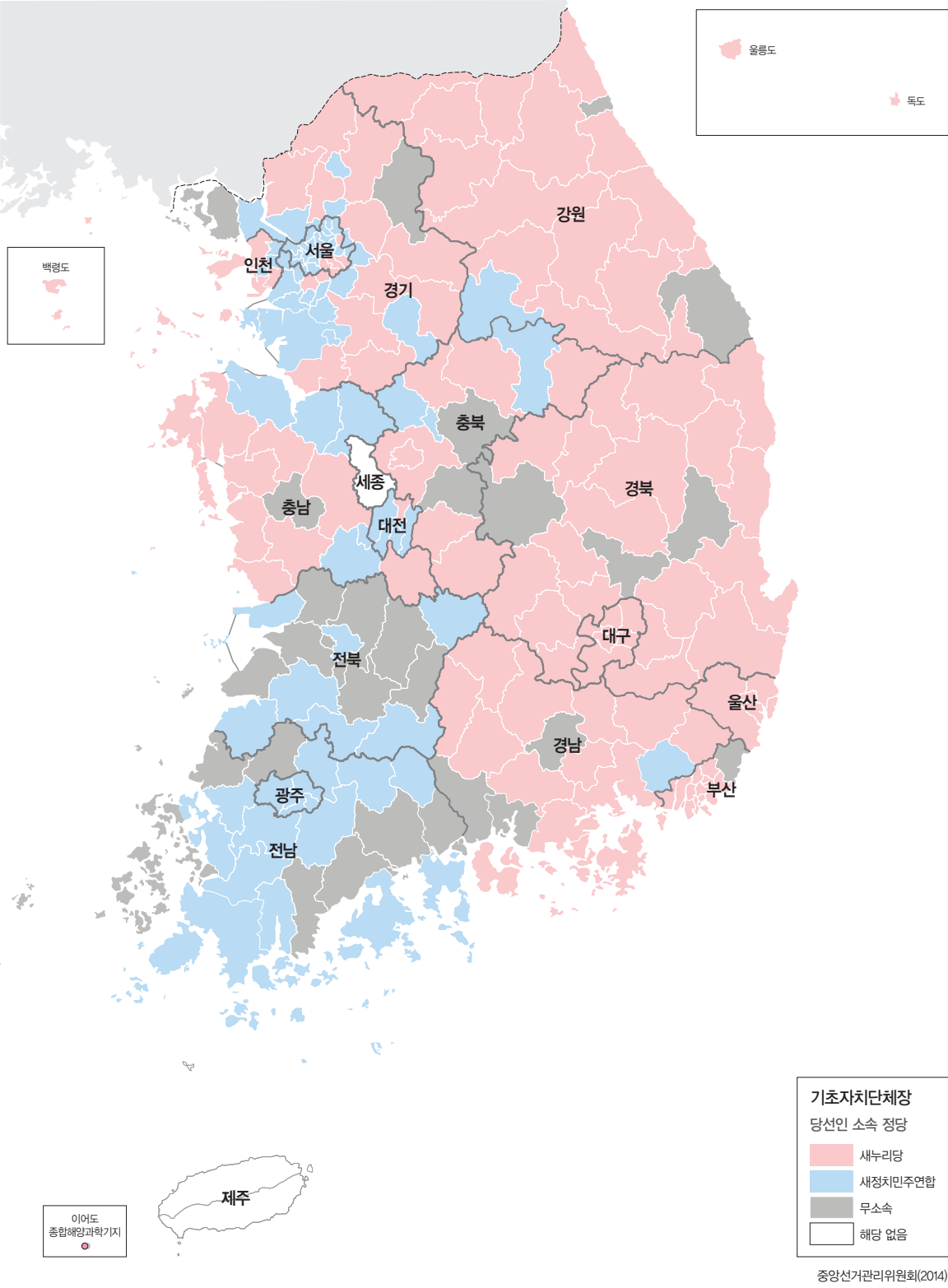
광역자치단체 선거 결과



광역자치단체 후보의 선거 비용



기초자치단체 선거 결과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주민이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는 점에서 지방 선거는 주민 참여의 중요한 수단이다. 1991년 지방의원 선거로 시작된 지방 선거는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6기의 지방자치 시대를 열게 되었다. 지난 20여 년 간의 지방자치 시대를 거치면서 지역 주도 및 자율성에 기반한 지방자치 문화가 확립되어 왔지만, 그 이면에 미흡한 자주 재정, 분권 등의 문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지방 선거는 지방자치에서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지방 선거에서 지역 내 구체적인 현안보다는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정당 정치의 권력 구조 등 중앙 정치적 이슈가 중심 어젠다를 형성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2014년 지방 선거의 투표율은 제1기 선거를 제외하고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사전 투표제의 확대 및 국민 생활의 안전 문제에 대한 증폭된 관심이 낳은 결과로 보인다. 우리나라 지방 선거에서는 정

당공천제가 실시되고 있고,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분포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여야의 양당 구도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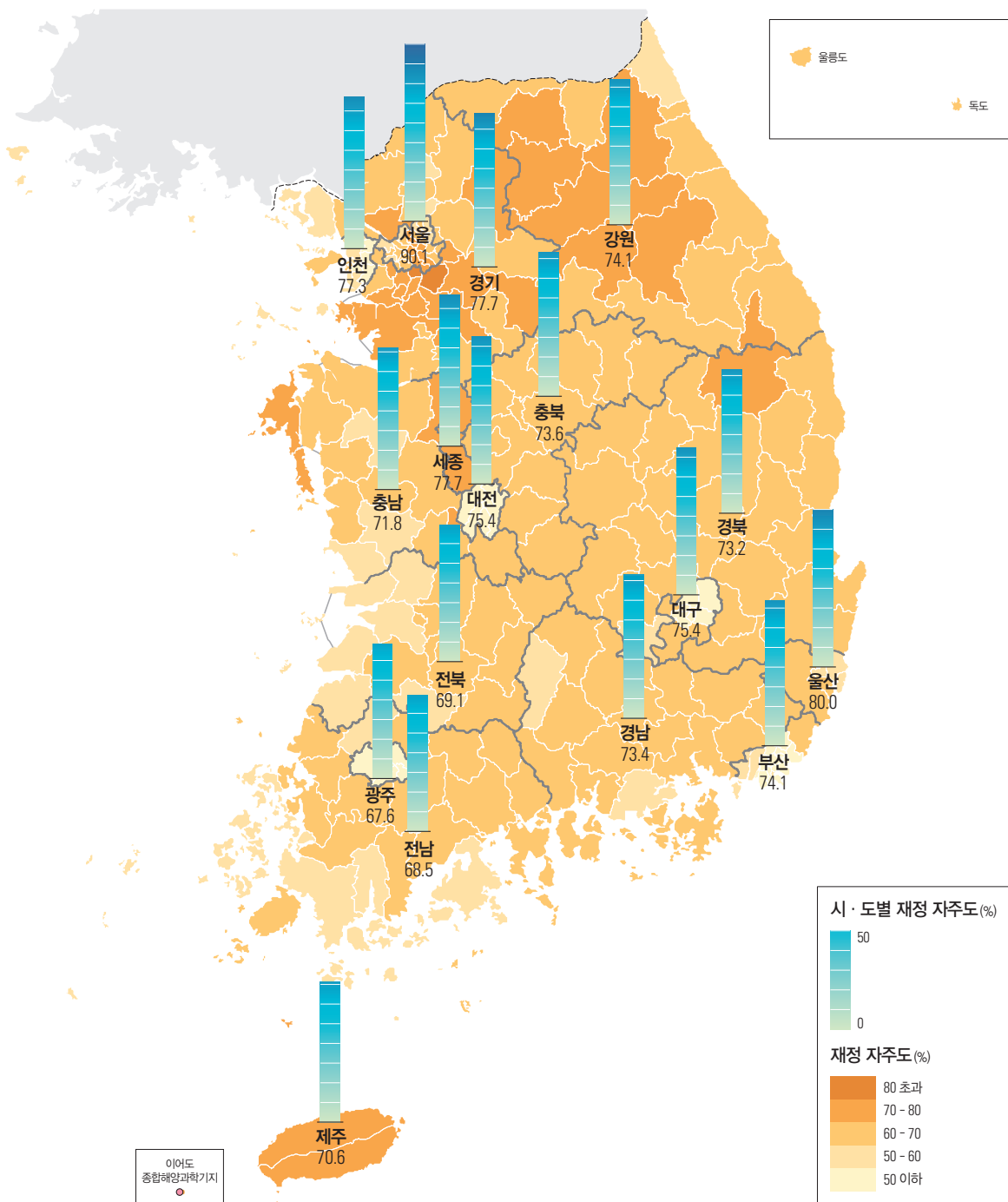
광역 단체장의 경우, 전체 17개 광역 자치 단체 가운데 새누리당이 8명(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경북, 경남, 제주)으로 47.1%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9명(서울,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으로 52.9%이다. 기초 단체장의 경우, 전체 226개 기초 자치 단체 가운데 새누리당이 117명으로 51.8%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80명으로 35.4%이며, 무소속이 29명으로 12.8%로 나타났다. 한편, 광역의원 선거는 전체 705명 가운데 새누리당이 375명으로 53.2%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309명으로 43.8%이며, 무소속 등이 21명으로 2.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기초의원 선거는 전체 2,519명 가운데 새누리당이 1,206명으로 47.9%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989명으로 39.3%이며, 무소속 등이 324명으로 12.9%를 차지하고 있다.

기초 의회 당선자 소속 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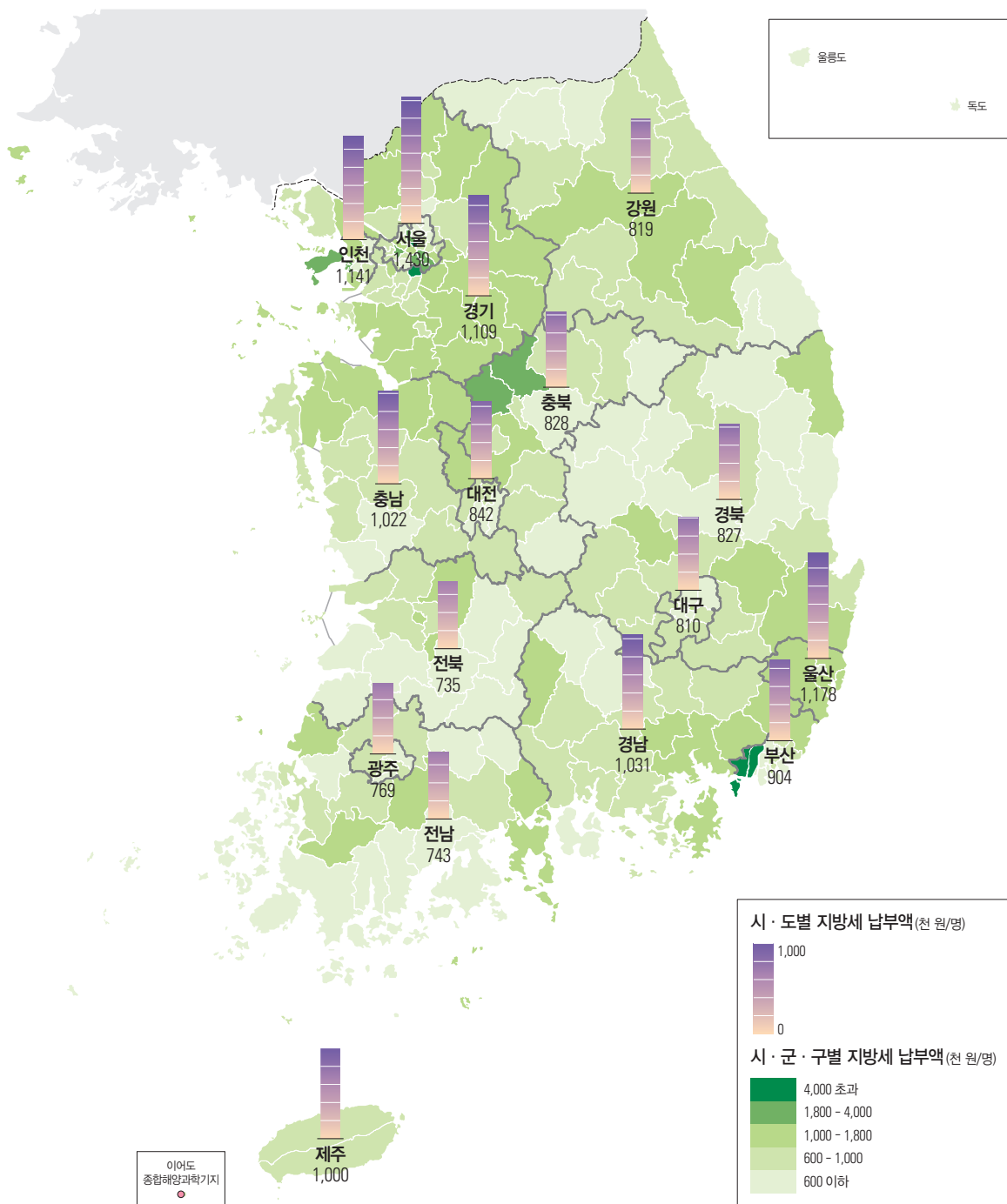


지방 재정

재정 자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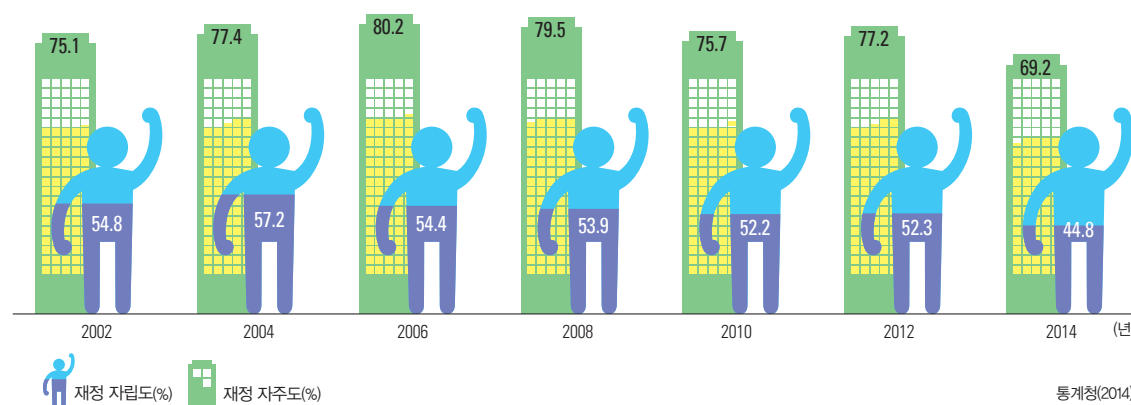
지방세 납부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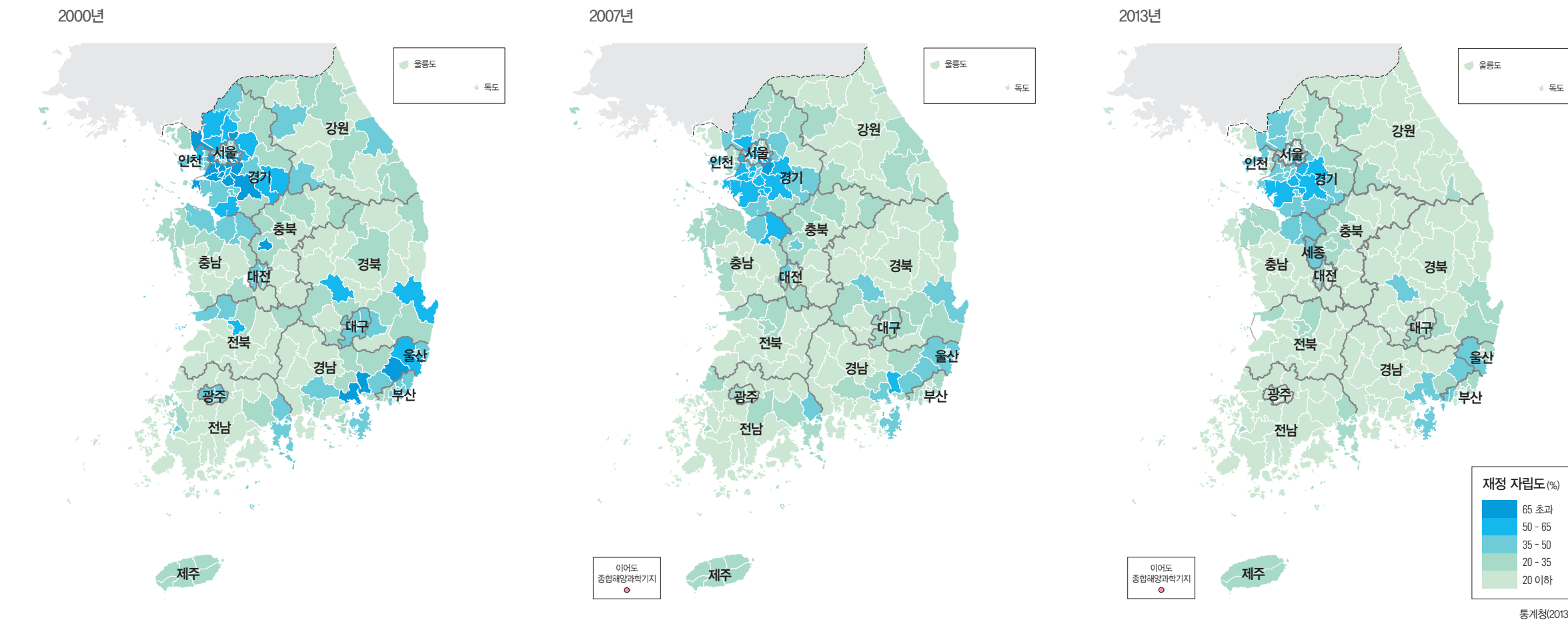
1991년 지방 의회의 구성을 통한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20여 년 동안에 지방자치와 지방 분권에 대한 많은 요구와 노력이 전개되어 왔다. 분권화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수요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맞춤형 지방 공공 서비스로 공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재정 분권의 확보이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1년 지방의 재정 자립도는 69%이었으나, 2012년에는

52.3% 수준으로 오히려 17% 가까이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현재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에 크게 의존하여, 결국 재정 운용에 있어 자율성과 책임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향후 자주 재원의 확보에 대한 요구는 지방자치의 심화에 따라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지방의 자체 재원의 확충과 지방 공공 서비스의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로 간주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및 재정 자주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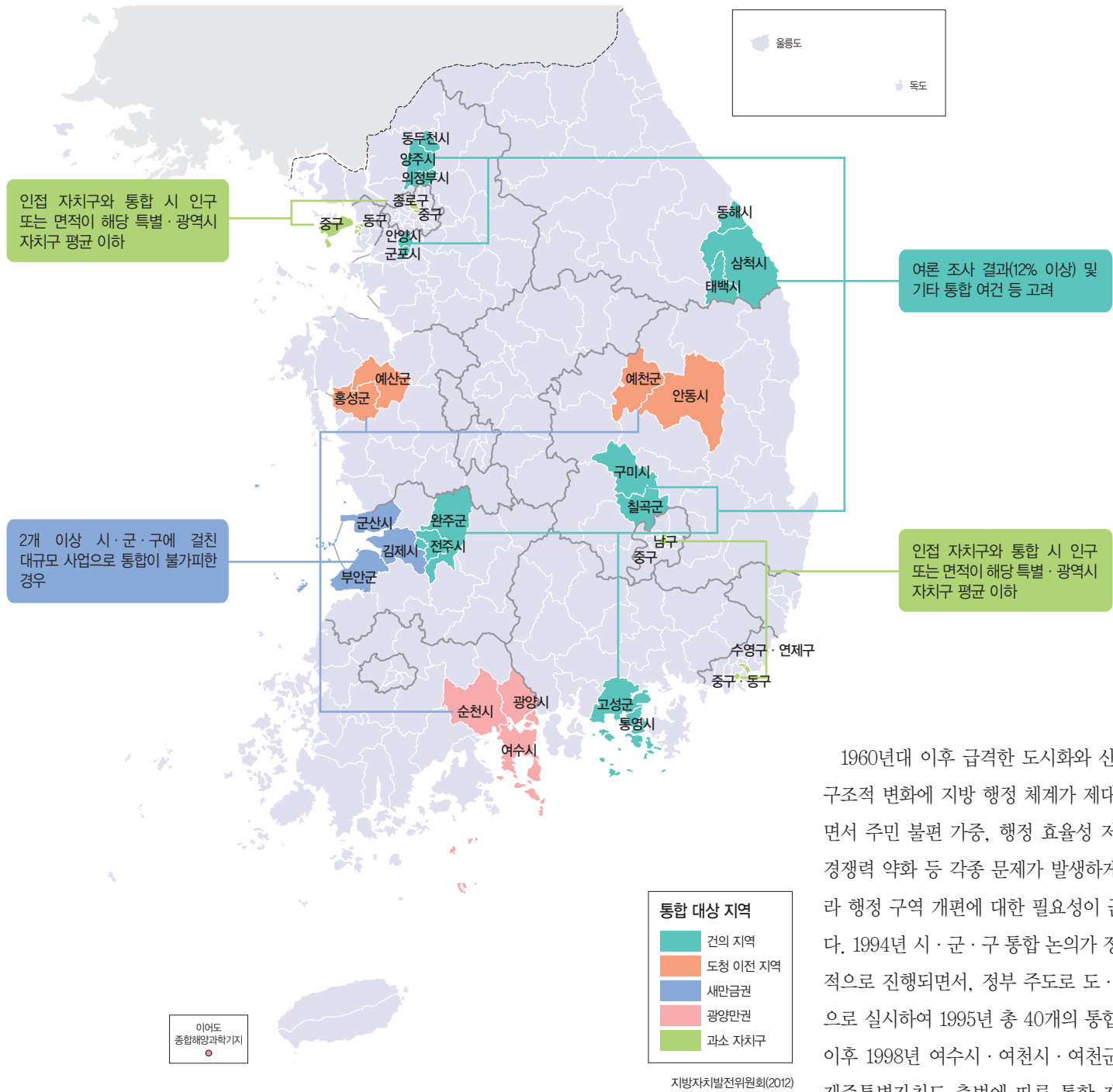


재정 자립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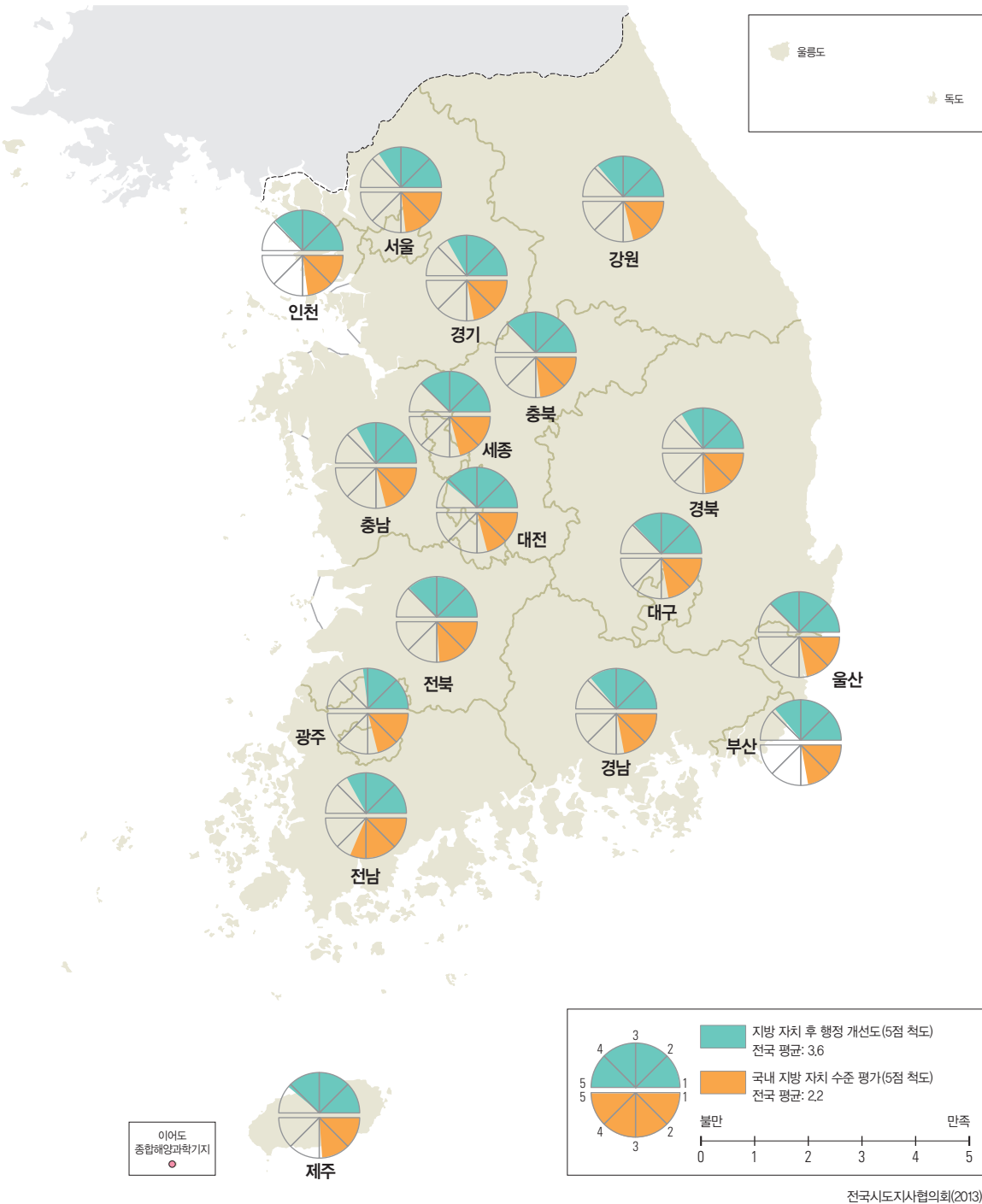


지방 분권

시·군·구 통합 대상 지역과 특징



지방 분권 여론 조사



시·군·구 통합 특례 제도 현황

| 분야 | 주요 내용 |
|----------|---|
| 지역 주민 특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새로운 부담 추가 금지 • 면허세·재산세·지방교육세의 기존 세율 적용 (5년 범위 내) |
| 지역 개발 특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률에 따른 지구·구역 지정 시 우선 지정 가능 • 각종 시책 사업 추진 시 우선 지원 |
| 재정적 특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에 사용된 직접 경비 지원과 재정 투자·융자 심사 시 우대 • 보통교부세의 재정 부족액이 통합 전보다 적을 경우 차액 보정(4년) • 통합되는 시·군당 특별교부세 50억 원 지원 |
| 행정적 특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에 따른 초과 정원을 정원 외로 인정 • 도농 복합 형태의 시와 인구 100만 명 이상 통합시는 설치 기준을 초과하여 한시 기구 설치 가능 |
| 지방 의회 특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기 의회 구성 시까지 폐지 지자체별 각 1명의 부의장 선출 • 지역 선거구 확정 시 폐지 지자체의 인구 등가성 반영 |
| 기타 특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 자동차 운임 기준·요율은 폐지 지자체 기준 적용 (1년 내 개정) • 시계 외 활동 폐지, 면허·등록 기준은 과거 기준 적용 |

지방행정체계 개편추진위원회(2013)

196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사회 구조적 변화에 지방 행정 체계가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면서 주민 불편 가중, 행정 효율성 저하,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약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 구역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1994년 시·군·구 통합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정부 주도로 도·농 통합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1995년 총 40개의 통합시를 탄생시켰다. 이후 1998년 여주시·여천시·여천군의 통합,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통합 제주시와 서귀포시 출범, 2009년 창원시·마산시·진해시의 통합 등이 추진되었다. 이후 2010년 「지방 행정 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되면서 그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시·군·구 통합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동 법률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의 지역, 과소 자치구 등 여러 조건에 부합하는 16개 지역 3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통합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하여 2014년 7월 1자로 통합 청주시가 되었다.

1991년 지방의회 구성과 함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및 사무 재배분 논의가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중앙 행정 권한의 지방 이전이 국정 개혁 100

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어 관련 법률 제정 및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구성 등이 추진되었다. 이때 중앙 행정 권한의 지방 이양 추진은 지방 분권 3대 추진 원칙인 ‘선분권 후 보완, 보충성, 포괄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참여 정부에서는 지방 분권의 국정 2대 과제로 격상되었고,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이 위원회의 핵심 기능은 정부 혁신·지방 분권의 방향과 전략 논의, 해당 관련 과제 추진 및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방 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08년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지방 이양 기능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 분권 기능을 통합하여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였다. 끝으로 박근혜 정부는 「지방 분권 및 지방 행정 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계개편위원회를 통합하여 2013년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발족하여 지방 분권 및 행정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특히 지방 분권을 위해 중앙 권한의 과감한 이양으로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제고, 국가와 지방 간 합리적 사무 배분, 지방 이양 확정 사무 이행력 제고, 지방 분권 과제의 체계적인 관리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요 이양 완료 사무

| 분야별 | 사무 내용 |
|--------------|---|
| 주민 편의 증진 분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 관련 기능 (행정안전부 / 국가 → 시·군·구) • 우수 문화 상품의 지정·표시 등 기능 (문화체육관광부 / 국가, 시·도 → 국가, 시·도, 시·군·구) • 건설 기계의 등록 등 기능 (국토해양부 / 시·도 → 시·군·구) |
| 행정 효율성 분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가제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기능 (문화체육관광부 / 국가 → 특별자치도, 시·군·구) • 유독물 영업에 관한 사무 (환경부 / 국가 → 시·도) • 산지 관리(50만㎡ 이상 200만㎡ 이하)에 관한 기능 (산림청 / 국가 → 시·도) |
| 지역 경제 활성화 분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재 채취 단지의 지정 등 기능 (국토해양부 / 국가 → 국가, 시·도) • 도매시장 운영 방법 개선에 관한 기능 (농림수산식품부 / 국가 → 특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 친환경 상품 구매 관련 기능 (환경부 / 국가, 시·도, 시·군·구 → 시·군·구) |

지방분권촉진위원회(2012)

중앙 정부 업무의 지방 이양 실적

